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유휴공간 문화재생에 관한 연구
-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사회혁신전공

김선미

유휴공간 문화재생에 관한 연구
-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부 열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사회혁신전공
김 선 미

김선미의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김 경 민 (인)

부위원장 송 재 민 (인)

위 원 김 부 열 (인)

국문초록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을 막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2014년 국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바뀐 이후 ‘문화를 통한 인식 제고’, ‘문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처럼 여러 정책에 자주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후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더욱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문화 민주주의’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기본권과 문화 민주주의의 개념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며, 문화를 통해 지역을 되살리겠다는 수사적 표현이 관성적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쇠퇴로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공간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01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문체부)’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년 차에 접어든 생활문화 사업은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생활문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공간 조성으로 이미 쓸모를 다한 공간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재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화정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생의 개념을 파악하고, 생활문화와 도시재생 관련 제도적 흐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경향과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 사례 조사 심층 분석을 통해 이러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물리적 환경 개선, 주민 문화향유 기회,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문헌 조사와 전국 173개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문화센터 75% 이상이 도시에 있으며,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비수도권-쇠퇴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다른 문화기반시설과 비교해 최근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비수도권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특성은 생활문화센터의 면적이나 예산의 편차는 컸으나, 운영 인력이나 프로그램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유휴공간의 정체성이나 특성을 살린 사례도 드물었다.

셋째,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 지역이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운영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애물단지인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의 기반을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운영 주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휴공간도 대부분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서라기보다 단순히 쓸모를 다해 오래 방치된 공간이 대부분이었다. 타 문화시설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내용도 거의 없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성공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적절한 행정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참여 대상과 내용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점점 증가하는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도 더욱 다각화되어야 한다. ‘문화’라는 개념에 막연히 기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휴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역사회에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동체, 지역문화, 생활문화센터
학 번 : 2020-28334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4
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 대상 및 범위 ····· 6
2) 연구 방법 ····· 7
3. 연구 구성 ····· 8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9
1. 이론적 배경 ····· 9
1)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9
2) 지역문화와 지역 공동체 ····· 11
3) 도시재생 ····· 13
4) 생활문화 ····· 14
2. 선행 연구 검토 ····· 18
1) 생활문화 ····· 18
2) 생활문화 사업 성과분석 ····· 21
3) 문화재생 ····· 22
3. 연구의 필요성 ····· 24

제3장 연구 방법 ····· 25
1. 분석의 틀 ····· 25
2. 연구 대상 ····· 26
3. 자료 수집 ····· 27
1) 문헌 조사 ····· 27
2) 사례 조사 ····· 27
4. 자료 분석 ····· 28

제4장 생활문화센터 일반 현황 ····· 29
1. 문화기반시설 ····· 29
1) 문화기반시설의 정의 ····· 29
2)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 29
2. 생활문화센터 ····· 33
1) 설립 취지 및 개요 ····· 33
2) 일반 현황 ····· 34
3) 공간 조성 방식 ····· 36
4) 지역 특성별 현황 ····· 37
5) 운영 특성별 현황 ····· 40
6) 기초 통계 ····· 42
7)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의 차이 ····· 44
8) 주요 사업 내용 ····· 45
9) 문제점 ····· 47

제5장 연구 결과 ····· 49
1. 문헌 조사 ····· 49
1) 노후화된 유휴공간 개선 ····· 49
2)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53
3)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 57
2. 사례 조사 ····· 61
1) 경기 상상캠퍼스 ····· 61
2) 백산 생활문화센터 ····· 67
3. 소결 ····· 69

제6장 결론 ····· 70
1. 요약 및 결론 ····· 70
2. 정책적 함의 ····· 72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75

부록 ····· 76
참고 문헌 ····· 83
Abstract ····· 86

표 목차

[표 2-1]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 ····· 15
[표 2-2] 생활문화사업 현장 모니터링 세부 점검 사항 ····· 22
[표 3-1] 지역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 ····· 26
[표 3-2] 운영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 ····· 26
[표 3-3] 생활문화센터 특성별 분류 기준 ····· 28
[표 4-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전년 대비) ····· 29
[표 4-2] 지역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 30
[표 4-3] 인구 백만 명당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 32
[표 4-4] 전국 생활문화센터 개요 ····· 35
[표 4-5] 공간 조성 방식별 개관 연도 ····· 37
[표 4-6] 공간 조성 방식별 공간 유형 ····· 37
[표 4-7] 지역 특성별 생활문화센터 현황 ····· 38
[표 4-8] 지역 특성별 공간 조성 방식 ····· 39
[표 4-9] 지역 특성별 공간 유형 ····· 39
[표 4-10] 지역 특성별 운영 방식 ····· 39
[표 4-11]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식 ····· 40
[표 4-12] 운영 방식별 생활문화센터 현황 ····· 41
[표 4-13] 공간 유형별 생활문화센터 현황 ····· 41
[표 4-14] 생활문화센터 운영 특성 기초 통계 ····· 42
[표 4-15]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 45
[표 4-16]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 46
[표 5-1]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 ····· 50
[표 5-2]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의 특징 ····· 52
[표 5-3] 생활문화센터와 타 문화시설과의 차별성 ····· 53
[표 5-4] 주요 문화기반시설 개요 ····· 54
[표 5-5] 경기상상캠퍼스 연혁 ····· 61
[표 5-6]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구성 ····· 64

[표 5-7] 백산생활문화센터 체험 프로그램 ····· 68
[부록 표1]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 지역 지표(2021년) ····· 76
[부록 표2] 도시쇠퇴와 생활문화센터 유무의 관계 ····· 77
[부록 표3]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공간 유형 차이 ····· 79
[부록 표4]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운영 방식 분포 차이 ····· 80
[부록 표5]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세부 운영 차이 ····· 8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8
[그림 2-1] 생활문화 지원사업 중요도 및 시급성 비교 ····· 20
[그림 3-1] 분석의 틀 ····· 25
[그림 4-1]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31
[그림 4-2]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생활문화센터 수 ····· 34
[그림 4-3] 공간 조성 방식별 개관 연도 ····· 36
[그림 4-4]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체계 ····· 45
[그림 4-5]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목표-수단-목적 ····· 47
[그림 5-1] 생활문화 정의에 관한 운영자 설문 결과 ····· 58
[그림 5-2] 생활문화 정의에 관한 참여자/관람객 설문 결과 · 59
[그림 5-3] 경기도 부지와 서울대 부지 ····· 62
[그림 5-4] 경기상상캠퍼스 ····· 62
[그림 5-5] 경기도 부지 ····· 63
[그림 5-6] 백산금빛체험캠핑장 ····· 67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문화란 무엇인가? 문학비평가이자 랭커스터 대학의 영문학 석좌 교수인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자신의 저서 〈문화란 무엇인가? (Culture)〉에서 지난 2세기 동안 문화 담론이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변화해 왔는지 설명하였다.

‘문화’는 19세기 초 유럽에서 그 개념이 탄생한 이후, 현재의 영화나 음악 같은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문화는 때에 따라 하나의 예술 장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양이나 인본주의 같은 정신적 발전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전통이나 관습, 혹은 총체적 삶의 방식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1]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란, 문화 연구의 선구자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주장한 개념으로, 문화의 일상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문화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역사, 지리, 사회, 민족, 인종, 성별, 나이부터 하다못해 입고, 먹고, 자고, 놀고, 죽고, 태어나는 것까지 전부 ‘문화’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이 문화인 셈이다.

문화는 ‘문명’과 대조적인 의미로 자주 쓰인다. ‘문명’과 ‘문화’는 한때 동의어로 쓰였으나,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고도화된 ‘문명’이 수많은 사회 문제를 낳을수록 ‘문화’는 더욱 고귀하고 초월적인, 일종의 이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정책에서 사용되는 ‘문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문화를 통한 인식 제고’, ‘문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 문화를 통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문화가 마

1) 참고. 테리 이글턴. (2021). 〈문화란 무엇인가?〉. 이강선 옮김. ㈜문예출판사

치 각종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문화가 지닌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궁색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에서 사용되는 '문화'라는 개념은 정책의 목적이나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

2020년 한겨레는 '세계적 수준이라던 '문화비축기지'는 왜 유령 전시장이 됐나'라는 기사를 실었다. 개관한 지 불과 3년 만의 일이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며 유사시 민간용 유류탱크의 필요로 조성한 석유비축기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돼 2000년 2002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폐쇄되었다. 이후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2013년 시민 공모전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2017년 9월 개관하였다. 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가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기지의 장소적 성격을 브랜드처럼 특화한 문화기획물은 사실상 전무하며, 시장, 서커스, 축제 같은 단기 이벤트에 편중'되었다(한겨레, 2020).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민이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YTN, 2022).'

이처럼 오랜 논의 끝에 야심 차게 조성된 대표적 문화재생 사례도 그리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마당에 구체적인 비전 없이 막연히 '문화'라는 개념에 기대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문화공간'이란 무엇이며, 여기서 뜻하는 '문화'는 어떤 의미인가? 또한 그 대상과 목적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화를 통한 재생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버려진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도시재생사업 패러다임을 보존에서 개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화를 통해 지역재생을 하겠다는 수사적 표현은 2014년 국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바뀐 이후 거의 관성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문화

와 떼려야 뗄 수 없게 되었다. 크게는 문화도시조성사업부터 작게는 유휴공간 업사이클링까지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이러한 사업의 공통점은 이른바 하드웨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소프트웨어는 '문화'로 채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단과 목적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과연 '문화'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처럼 문화재생 사업의 목표가 다소 허무맹랑할 정도로 거창한 까닭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변화와는 달리 문화적 영향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문화재생사업의 평가 방식은 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 전후의 성과를 평가할 만한 뚜렷한 기준도 없다. 최근 문화재생 사업에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다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 연구 목적

‘문화’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시재생에 접목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 목적과 수단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문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목적을 현실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생 정책에서 문화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환경, 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재생 사업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문화도시 조성이나 지역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역사적 공간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예산이나 규모, 운영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생활문화센터로 제한하였다.

국내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는데, 이 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운영 목적이 분명하고, 공간도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 설계된다. 201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참여 접근성을 제고(문체부)’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노후화된 유휴공간 활용, 지역공동체 회복 등 대외적, 실제적, 내재적 목적이 각기 다른 문화적 가치를 앞세우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사업의 핵심으로 공간 조성에 600억 원 이상 투입되었으나, 운영 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산이나 운영 주체, 운영 인력에 따라 운영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와 비도시, 농어촌 및 산간 지역 등 지역에 따라서도 성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지역문화진흥원, 2022).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며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에 나섰으며, 어느 때보다

현장 기반의 성과분석과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고 지원 사업은 2020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화재생 사업은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유휴공간이 사용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노화된 도심이나 상권의 변화, 인구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로 운영한다는 안이한 접근으로 쓸모를 다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따라서 본 연구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생활문화센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 검토와 사례 조사를 통해 노후화된 유휴공간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지역 공동체와 지역 문제 해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지역의 특성과 운영의 특성, 기존 문화시설 활용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문화정책이 수립된 배경과 목적, 운영 현황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실제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문화재생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질문.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노후화된 유휴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주민 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적 맥락과 운영 특성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 유휴공간의 정체성이나 특성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의 차이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실증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①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 분석, ②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③사례 조사로 나뉜다. 운영 실태 분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읍면동)〉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둘째, 공간적 범위는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173개 지역 중 한 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2개 이상 중복인 3곳을 제외한 총 17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시간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통계가 수록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와 실증 분석, 사례 조사로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문화 관련 정책의 전개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관기관 보고서와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해 생활문화 정책에서 의미하는 문화재생의 개념과 사업 목적을 개념화하였다.

실증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유휴공간의 활용이 지역 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이 도시의 규모, 수도권 여부, 도시쇠퇴 여부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도시의 규모, 수도권-비수도권 여부, 도시쇠퇴 유형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차이를 들여다본 후, 이러한 지역별 특성이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에 영향을 미치는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공간 유형과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연간 예산, 운영 인력,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 등 세부 항목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례 조사에 앞서 문헌 조사를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공동체 의식 제고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 생활문화센터와 백산 생활문화센터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연구 구성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문화 민주주의,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등 생활문화 개념의 이론적 배경과 제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생활문화 정책의 본래 취지와 지향점을 지역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 선정과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등 연구 방법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화재생의 의미와 목적을 구체화한다. 5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다. 6장에서는 연구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후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구성
이론적 배경	•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지역문화와 지역 공동체 • 도시재생 • 생활문화
연구 방법	• 분석의 틀 • 연구 대상 • 자료 수집
생활문화센터 일반 현황	• 문화기반시설 개요 • 생활문화센터 현황 • 문제점
연구 결과	• 문헌 조사 - 노후화된 유휴공간 개선 - 주민의 문화 향유 -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 사례 조사 - 경기 생활문화센터 - 백산 생활문화센터
연구 결론 및 시사점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 및 문헌 고찰

1. 이론적 배경

1)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는 자신들이 생활하는 집단을 사회화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영향은 인류가 공공 또는 민간 정책과 행동을 취한 결과로 나타난다(곽강희, 2021). 따라서 '생활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정책에서 사용되는 문화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서의 문화, 즉 문화권(Cultural Rights)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를 통해 인간의 주요 권리를 정의하면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문화 향유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한 것이다. UN 산하 기구 UNESCO도 〈세계문화보고서(World Culture Report)〉를 통해 문화예술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문화권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빈곤, 사회적 갈등 등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문화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화 분야는 UN SDGs와 UN-Habitat Ⅲ의 신 도시 의제에 직접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기저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세부 의제에도 문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특히, 팬데믹 위기 이후 UNESCO에서 발간한 〈문화정책의 (재)구성(2022)〉는 문화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하는 전 지구적 공공재'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흐름은 크게 문화 혜택 확산과 문화 창조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며, 이론적 배경은 각각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 두 개념 모두 문화권을 근거로 하지만 그 지향점은 다르다. '문화의 민주화'는 클래식, 발레, 순수미술 등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에 대한 것으로, 장르로서의 예술에 중심을 두며, 문화바우처, 찾아가는 예술서비스 등을 통해 문화복지 차원에서 대중의 향유 기회를 높인다. 이에 반해 문화 민주주의는 '아마추어예술, 지방예술, 실험예술, 대중예술을 아울러 대안문화, 비기구화, 비집중화란 특성을 가지며, 예술의 '질'보다 정치적·성적·민족적·사회적 형평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외 지역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의 민주화' 차원에서 문화권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기 시작하였고, 2014년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문화권이 제도화됐을 때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문화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써,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뜻한다.[2)]

이처럼 문화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의 두 가지 목표가 뒤섞이면서 현장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정책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문화권은 국내·외 문화정책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규범적·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숙의 없이 문화권을 정책 용어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문화권을 단순히 문화와 관련된 여러 기본권의 상위개념이나 지향점으로 통용하게 되었다.

---

2) 「문화기본법」 제3조, 제4조

문화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실천적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고 있으며, 개별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 지역 여건에 따라 그 해석도 달라진다. 따라서 생활문화사업이라는 구체적 활동의 관점에서 이러한 광의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활문화사업의 정책적 함의나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배경,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과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문화와 지역 공동체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문화기본권과 문화 민주주의의 개념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맥락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하는데,[3] 생활문화를 논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지역문화'다.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자발적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지역문화발전 및 진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김기봉, 2016).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개념이 문화정책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였으며, 2014년 문화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기본법」과 생활문화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유지연, 2018).

지역문화는 본래 서울에 대응되는 '지방'의 개념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이나 수도권 밖 지역의 문화를 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방을 서울의 종속적

3)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개념으로 여기거나 지방문화를 하위문화로 보는 시각이 늘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문화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기 지역문화 정책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문화 서비스 공급이나 복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역의 중소도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해체, 도시쇠퇴와 도시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의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지역의 문화정체성 상실이나 지방정부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중첩되어 있다(김세훈&서순복, 2013). 그 결과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인구감소가 현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가 지역 활성화의 주제어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세훈&서순복, 2013).

이것은 문화 민주주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지역문화 관련 정책이나 여러 연구에서도 생활문화 활동을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의 주요 민간위탁 주체인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기반의 문화정책 거버넌스로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발전 동력을 상실한 지역에서 인구가 지속해 감소하고 고용이나 소득수준이 감소하는 과정은 도시쇠퇴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도시쇠퇴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양상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재정 여력,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 쇠퇴하거나 정체된 지역에서 주민 참여나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략과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나 물리적 환경 개선과는 달리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지리적 관점에서 하나의 공간 단위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회적 관계로 보기도 한다.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역 공동체의 개념은 정책의 취지상 지리적 공간 개념보다는 활동 주체인 지역 주민에 초점을 두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21 문화예술활동 생활문화센터 이용률’[4] 조사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의 96.4%가 거주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문화센터 관련 연구에서 말하는 지역 공동체는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기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농어촌 마을리모델링(농림축산식품부) 등 사업 내용도 부처별로 다양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사업이나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 일환 중 하나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정책에서 ‘문화’란 공통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주민 간 유대감과 신뢰, 결속력을 높여주는 접착제 개념으로 쓰인다.

3)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도시쇠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도시쇠퇴(urban decline)에 대한 이해는 도시지리학, 도시사회학, 도시계획학 등 분야의 관점에 따라, 또는 연구자가 소속된 국가의 도시적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며, 도시쇠퇴에 대한 단일하고 보편적인 개념적 정의는 내리기 어렵다(곽희종, 2022).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되며[5], ①인구사회, ②산업경제, ③물리환경 3개 부문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진단하여 도시재생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도시쇠퇴를 진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인구감소 현상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규모나 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도시쇠퇴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4)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1 문화예술활동 공간별 이용률 – 생활문화센터’에 따르면,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서울(59.1%)을 제외한 전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모두가 현재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 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등장한 개념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써[6]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7]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은 2013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제정을 기점으로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에서 기존도시의 정주여건과 매력을 극대화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되었으며, 도시재생의 주요 주체로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사회와 더불어 문화와 지역 공동체는 도시재생의 필연적 구성 요소이자 고려 대상이다(이경진&안지현, 2018).

생활문화센터는 그 자체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사례이자 지역사회의 소통 플랫폼으로써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정책은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생활문화

생활문화의 개념이 문화정책에 처음 등장했을 때 생활문화는 주로 문화향유 및 참여적 문화활동과 관련된 개념이었다(정광렬, 2016). 물론 생활문화는 지역문화를 언급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개념이자 용어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에서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향수, 문화민주주의라는 용어와 함께 등장하였다(김기봉, 2016).

생활문화의 개념은 크게 4가지 차원에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전문예술이나 창작자 중심의 엘리트 예술과 대비되는 행위자 관점, ②예술이

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94호(2013.12.31.) 참고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확장된 장르적 관점, ③일상적 문화의 개념으로써의 공간적·시간적 관점, ④문화활동의 대상 및 주체성, 방식과 관련된 관점이다(정광렬, 2016). 이러한 변화단계를 정리하면, [표 2-1][8]과 같다.

[표 2-1]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

관점	시기	내용 및 특성
행위자 관점	1990년대 초	• 전문예술이나 창작가가 아닌 일반 시민, 아마추어의 문화활동 • 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 • 비전문가의 창작활동
장르적 관점	1990년대 ~2000년대 초	• 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정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 • 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
공간·시간적 관점	2000년대	•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아닌 일상생활 속의 문화활동 • 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님
활동의 방식 관점	2010년대	• 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 • 창작활동 여부가 아니라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적 참여기준 • 수동적 문화강좌 등은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제외

정광렬(2016)에서 재인용

이처럼 생활문화 개념은 “창작자 중심의 정책과 대비한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창작자 중심의 문화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문화향유 중심, 문화 인프라 조성 등으로 변했고, 이후 문화복지의 개념을 벗어나 참여적인 문화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화해 왔다”(한상헌 외, 2018). 이후 시민문화, 자발적 문화, 비공식 예술, 참여예술, 아마추어 예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정광렬, 2016).

생활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은 2004년 이후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차원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의 일상적 문화예술 향유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8)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 정광렬 연구 (2016). Print. p.18. 〈표 2-3〉 참고

「문화기본법」에 이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생활문화 지원 사업은 비로소 국가정책으로써 제도적 틀을 갖춰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은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에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을 만들어 입법화함으로써 문화정책 차원에서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①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 ②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③문화환경 취약지원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9)]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의 중요한 속성으로 자발성과 일상성을 들고 있으며(김기봉, 2016), 시설 확충과 지원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문화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의 관점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는데, 이때 생활문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지역문화진흥원, 2022).

이렇듯 생활문화 개념은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자발적 주민 참여와 자생성뿐 아니라,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 지원 등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의 문화 보존,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지역적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삶의 전반에 걸친 광의의 '문화'였던 생활문화가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분리된 것은 '지역 공동체' 개념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규원, 2019). 정책적으로도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정책에서 관계의 재설정, 문화의 재정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써 생활문화 개념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문화의 개념은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민주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문화 관련 정책에 내재한 목적

9)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공동체 회복,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과 다양한 해석은 생활문화 정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며, 사업 성과의 측정도 어렵게 한다.

2. 선행연구

1) 생활문화

생활문화가 제도화된 것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제도화되기 이전의 생활문화는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나 ‘이웃’, ‘공동체 문화’처럼 ‘노동’과 대응되는 일상적 개념으로 쓰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 시기에는 지역과 생활이 문화의 개념과 뒤섞이면서 주로 지역이나 공동체, 지역문화운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화정책의 흐름이 문화 민주주의 방향으로 전환된 2004년 이후부터 생활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을 전후로는 생활문화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개념 정립에 관한 기초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제도적 안정기 접어들고, 생활문화 지원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생활문화센터나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등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정책 제언이 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연구 목적이나 주제별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로, 김기봉(2016)은 생활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와 유사한 개념인 지역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공동체 회복의 수단으로써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광렬(2016)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생활문화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 정립을 시도”하면서, 생활문화진흥 전담 조직의 역할과 효과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지연(2018)은 생활문화진흥이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까지 문화정책상의 변화를 1980년대 문예진흥과 향유,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문화복지와 교육, 2004년 이후 생활문화정책 본격화 단계 등 중심 정책별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김규원(2019)은 다중적 의미를 지닌 생활문화의 개념이 정책 용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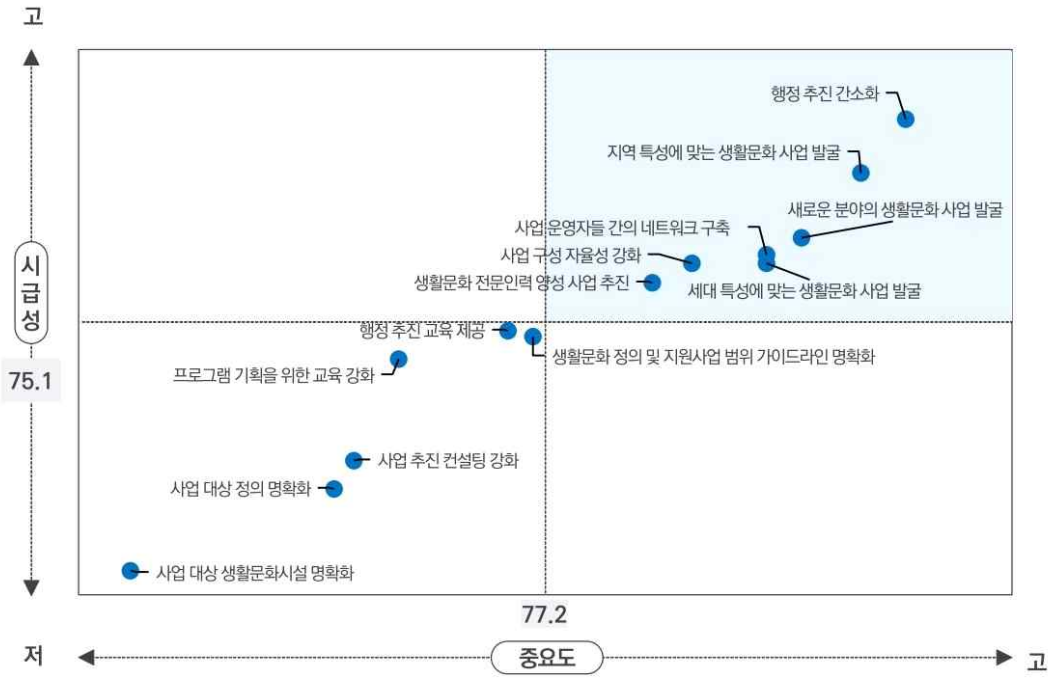
쓰이면서 어떠한 맥락으로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생활문화와 도시, 지역에 관한 연구다. 정경미&이원곤(2019)은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계기가 된 '문화 민주주의' 정책의 개요와 실천과제, 전환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강윤주(2014)는 생활예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을 꼽았으며, 서익진(2016)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문화적 의미와 역할을 정의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제어로 '지역 공동체', '생활문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이재열(2006)은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지역 공동체라고 하였으며, 박병춘(2012)은 "지역주민과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를 지역 공동체로 보았다. 이기태&하현상(2016)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유대를 공유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생산하는 집단"으로, 서울시(2012)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세 번째는 생활문화사업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다. 생활문화 관련 사업은 ①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②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③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④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원, ⑤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⑥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시범사업) 이렇게 6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는데, 단위사업별로는 생활문화센터와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주로 지역이나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임재현&한상헌(2019)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생활문화활동의 참여방식이 개인(창의성, 자존감)과 지역사회(사회참여, 교류)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강수현&김동언(2021)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생활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용인시 보정역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수경&손유진(2021)은 생활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준을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생활문화

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는 생활문화사업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다. 생활문화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는 생활문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2017년, 2018년, 2021년에 시행한 바 있다. 2017년, 2018년 연구는 주로 참여자 중심의 인지도 또는 만족도 조사였는데,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고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성과지표체계를 만들어 추진 성과를 검토하였다.



[그림 2-1] 생활문화 지원사업 중요도 및 시급성 비교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22))

[그림 2-1][10]는 정책 방향성에 관한 운영자 설문조사 결과로, 운영자들은 생활문화 지원사업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점으로 '행정추진 간소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 사업 발굴' 등을 꼽았다. 설문 대상자가 행정 업무를

10) 지역문화진흥원. (2022).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p.266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임을 생각하면, 사업 내용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의 단위 사업 전부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단위사업별 특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2) 생활문화 사업 성과분석

지표는 사업의 현황과 특수성을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간 문화정책은 정량적 판단이 어렵다는 특성상 지표체계 개발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들어 문화영향평가 등 다양한 지표체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문화 지원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마다 다양한 성과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분석이 담긴 가장 최근 자료인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지역문화재단, 2022)〉는 생활문화 성과분석 지표[11]를 설계하고, 운영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성과분석은 지역별 생활문화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문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지원사업 전체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 내용도 참여자 활동 중심의 단순 현황에 그치고 있으며, [표 2-2][1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 모니터링 세부 점검 사항도 모호한 개념이 많아 평가자의 사업 이해도나 가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11) 지역문화진흥원. (2022).「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p.134-135; 공통지표 10개 (①활동 동기, ②활동 양태, ③정보 수집, ④활동 시간, ⑤활동 공간, ⑥활동 비용, ⑦활동 만족도, ⑧참여 효과, ⑨애로사항 및 공공지원 필요사항, ⑩정책중요도와 만족도)와 사업단위별(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개별지표 조사

12) 지역문화진흥원. (2022).「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p.136, 〈표 4-6〉

[표 2-2] 생활문화사업 현장 모니터링 세부 점검 사항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점검 사항
사업 추진	• 사업운영자가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었는가? • 당초 기획한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되었는가? - 세부 사업계획서 추가 참고
지역이해	• 프로그램이 추진된 장소가 적절하였는가? - 장소선정의 기준,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해당 장소의 의미성과 주민이해도 등 파악 • 지역의 문화환경,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혹은 진행되었는가?
공동체성	• 운영자와 참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가? • 기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까지 적절한 역할 배분이 되었는가? • 사업을 통해 공동체 형성, 주민 간 관계 회복,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되었는가?
사업 효과	• 사업 수행 전과 후 생활문화, 문화사업,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는가? • 지역 내 다양한 인력의 유입,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실제 참여와는 다른, 열린 기회 제공 측면)
정책방향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 정책은 무엇인가? • 사업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및 사업 추진 방안이 있는가?

지역문화진흥원(2022).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생활문화센터 주요 위탁 기관인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지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시군구 단위의 자체 지표와 지수를 개발해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자원, 지역문화활동, 지역문화향유 등 4개 분류와 이를 종합한 종합지수로 지역의 문화여건을 파악하고, 지역 간 격차를 비교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3) 문화재생

최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생활문화SOC나 문화도시 조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지역의 도시쇠퇴를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익진(2016)은 도시재생에서의 문화를 '삶의 총체적 범위에서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문화적 활동과 그 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 사례를 운영 주체별, 지역의 기능적 특성(원도심, 상가, 주거지 등), 접근방법별(물리 ·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복합) 유형으로 정리하면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 실행전략을 정리하였다.

곽희종(2022)은 시군구 단위의 도시쇠퇴 지표를 활용해 도시특성별 쇠퇴유형을 나누고, 도시특성과 쇠퇴특징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도시와 농촌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쇠퇴지표별 쇠퇴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처방과 예방차원의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모아&이현성(2022)은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의 성공 요인과 거버넌스의 특성을 계량적 분석 방법으로 도출하면서 시민 참여와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균&이금진(2019)은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례에서 운영의 전문성 결여, 운영 주체의 의지 부족,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로 다시 유휴시설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선행 연구 및 10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재생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연진(2009)은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외의 유휴공간 사례 조사를 통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의 문제점으로 장소성의 결여를 지적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교류 및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문화 민주주의, 지역문화와 지역 공동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생활문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화된 유휴공간의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적 교류와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문화'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정책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뒤섞이면서 실제 사업의 규모에 비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을 막겠다'며 발표한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체부는 이 자료에서 정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친환경 가치를 고려한 유휴·노후시설 '그린 리모델링' 및 기존생활공간을 문화재생하여 미래세대와 자원을 공유(문체부, 2023)'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구, 경제, 환경 등 도시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문화'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단순화해 버리는 관성적 행태를 버리고, 지역별·운영 유형별 특성을 면밀히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생활문화센터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한 도시재생의 관점이나 지역적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도 주관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이나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 분석 또한 생활문화센터 이용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참여 유형, 만족도 평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대표적 사례인 생활문화센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 방법

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실현 가능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와 도시재생의 의미를 검토한 후, 생활문화 정책의 개념을 좁혔다. 이어 지역 특성별, 운영 유형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과 세부 목적이 무엇인지 탐색해 본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한 뒤, 이것이 문화재생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한다.

[그림 3-1] 분석의 틀

2. 연구 대상

현황 조사는 2022년 기준 전국 생활문화센터 173개소, 2021년 기준 14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성은 읍면동 단위이며, 같은 읍면동 내에 생활문화센터가 2개 이상 중복되는 3곳을 포함해 총 17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활문화센터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는 2021년 기준 총 51개소이며, 지역별로 나누면 [표 3-1], 운영별로 나누면 [표 3-2]와 같다. 이 중 수도권-대도시-비쇠퇴지역과 비수도권-농어촌-쇠퇴지역, 위탁 운영과 주민 자율 운영 생활문화센터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표 3-1] 지역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

구분		지역(개)	비율(%)
수도권 여부	수도권	38	74.5
	비수도권	13	25.5
도시 규모	대도시	18	35.3
	중소도시	19	37.2
	농어촌	14	27.5
쇠퇴여부	비쇠퇴지역	19	37.3
	쇠퇴지역	32	62.7
계		51	100.0

[표 3-2] 운영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

구분		지역(개)	비율(%)
운영 방식	위탁	26	51.0
	직영	23	45.1
	자율	2	3.9
계		51	100.0

3. 자료 수집

1) 문헌 조사

생활문화센터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13]과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주로 활용하였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해마다 발간되고 있는 자료다. 본 연구가 활용한 2021, 2022년 총람에 수록된 문화기반시설별 운영 현황은 문화기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통계는 2020년부터 수록되었다.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수록된 생활문화센터 정보는 ①운영방식, ②공간유형, ③개관현황, ④인력현황, ⑤예산, ⑥프로그램수, ⑦이용자수 등이며, 통계의 기준시점은 2022년 1월 1일이다.

2) 사례 조사

사례별 세부 운영 현황은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비롯해 〈2021 생활문화센터 조성길잡이〉와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길잡이〉 등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생활문화 토론회 자료집(지역이 문화다. 생활문화와 지역화)〉 같은 세미나·포럼 자료와 언론 기사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탐구하고, 생활문화 정책에서의 문화재생 개념과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부족한 부분은 개별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경기 생활문화센터는 현장 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강하였다.

---

13)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종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4. 자료 분석

생활문화센터의 지역 및 운영 특성과 관련된 분석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활용하였으며,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도시 규모, 수도권 여부, 쇠퇴 여부에 따라 [표 3-3]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3-3] 생활문화센터 특성별 분류 기준

구분			설명	비고
지역 특성	도시규모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중소도시: 시군구 비도시: 농어촌, 읍면	
	수도권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 등 39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그 밖의 지역을 비수도권(지방)으로 분류	
	쇠퇴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분류 기준[14]에 따라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3개 부문 중 2개 이상 해당) 쇠퇴지역/비쇠퇴지역으로 구분	2021년 기준 (통계청)
운영 특성	운영 방식	위탁	문화재단,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위탁 운영	2014~2022
		직영	시군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 지자체 직영 운영	
		자율	마을위원회, 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 운영	
	공간 유형	단독	건물 전체를 생활문화센터로 이용	2022
		복합	건물의 일부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이용	
	조성 방식	기존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리모델링	~2021
		유휴	지역의 노후화된 유휴공간 리모델링	

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분석지표 개방데이터_도시재생 활성화 진단지표. [부록 표1] 참고

제4장 생활문화센터 현황

1. 문화기반시설

1) 문화기반시설의 정의

‘문화기반시설’이란, 흔히 사용하는 ‘문화시설’과 구분되는 용어로,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문화정책 관련 분야에서 자주 등장한다.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복합 종합시설 등(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문화기반시설은 이에 비해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인프라(Infra)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7).

2)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표 4-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전년 대비)

주요 변수	시설수		비고
	2021년	2022년	
국립 도서관	4개	4개	-
공공 도서관	1,172개	1,208개	36개 증
박물관	900개	909개	9개 증
미술관	271개	285개	14개 증
생활문화센터	147개	173개	26개 증
문예회관	262개	267개	5개 증
지방문화원	230개	231개	1개 증
문화의집	101개	68개	33개 감
합계	3,087개	3,145개	58개 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수록된 문화기반시설은 [표4-1]과 같이 국립 및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이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통계는 2020년부터 수록되었다.

2022년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은 총 3,145개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특히, 생활문화센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지역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명, 개)

구분	지역	총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1	서 울	435	3	195	130	44	8	27	25	3
	부 산	139	-	49	33	9	20	12	16	-
	대 구	95	-	44	17	4	11	11	8	-
	인 천	126	-	58	30	5	12	11	10	-
	광 주	74	-	24	12	14	8	8	5	3
	대 전	63	-	26	15	5	4	5	5	3
	울 산	44	-	19	11	1	3	5	5	-
	세 종	24	-	13	7	-	2	1	1	-
	경 기	591	1	300	128	58	19	44	31	10
	강 원	241	-	60	97	22	17	23	18	4
	충 북	141	-	54	43	11	4	12	11	6
	충 남	183	-	63	64	10	9	18	15	4
	전 북	180	-	64	43	21	16	17	14	5
	전 남	230	-	71	65	38	10	21	22	3
	경 북	221	-	70	75	11	10	27	23	5
	경 남	228	-	76	77	11	14	22	20	8
	제 주	130	-	22	62	21	6	3	2	14
총계		3,145	4	1,208	909	285	173	267	231	68
2	수도권	1,152	4	553	288	107	39	82	66	13
	지 방	1,993	0	655	621	178	134	185	165	55
총계		3,145	4	1,208	909	285	173	267	231	68
수도권 비율			100.0%	45.8%	31.7%	37.5%	22.5%	30.7%	28.6%	19.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역별로 보면, 총 3,145개의 문화기반시설 중 경기도가 591개,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18.8%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35개(13.8%), 강원 241개(7.7%) 순이다(문체부, 2022). 소재지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묶어 수도권 외 지역과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에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6.6%가 분포한다.

생활문화센터는 부산(20개), 경기도(19개), 강원도(17개) 순으로 많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22.5%, 지방 77.5%로, 문화의 집을 제외한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수도권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문화센터가 비수도권 지역에 많은 이유는 생활문화센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독서와 장서 보관을 위한 도서관이나 전시, 소장품 보관을 위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운영 목적이 분명하고 공간 조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반해,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규모가 비교적 작아 기본 설비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 중 생활문화센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림 4-1]과 [표 4-3]을 보면,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제주(192.1개), 강원(156.7개), 전남(125.5개) 순이며, 수도권은 44.3개, 비수도권은 77.8개로, 지역별 인구 대비 문화시설 수는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4-3] 인구 백만 명당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명, 개)

구분	지역	인구 수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1	서 울	9,509,458	45.74	20.51	13.67	4.63	0.84	2.84	2.63	0.32
	부 산	3,350,380	41.49	14.63	9.85	2.69	5.97	3.58	4.78	0
	대 구	2,385,412	39.83	18.45	7.13	1.68	4.61	4.61	3.35	0
	인 천	2,948,375	42.74	19.67	10.18	1.7	4.07	3.73	3.39	0
	광 주	1,441,611	51.33	16.65	8.32	9.71	5.55	5.55	3.47	2.08
	대 전	1,452,251	43.38	17.9	10.33	3.44	2.75	3.44	3.44	2.07
	울 산	1,121,592	39.23	16.94	9.81	0.89	2.67	4.46	4.46	0
	세 종	371,895	64.53	34.96	18.82	0	5.38	2.69	2.69	0
	경 기	13,565,450	43.57	22.12	9.44	4.28	1.4	3.24	2.29	0.74
	강 원	1,538,492	156.65	39	63.05	14.3	11.05	14.95	11.7	2.6
	충 북	1,597,427	88.27	33.8	26.92	6.89	2.5	7.51	6.89	3.76
	충 남	2,119,257	86.35	29.73	30.2	4.72	4.25	8.49	7.08	1.89
	전 북	1,786,855	100.74	35.82	24.06	11.75	8.95	9.51	7.83	2.8
	전 남	1,832,803	125.49	38.74	35.46	20.73	5.46	11.46	12	1.64
	경 북	2,626,609	84.14	26.65	28.55	4.19	3.81	10.28	8.76	1.9
	경 남	3,314,183	68.8	22.93	23.23	3.32	4.22	6.64	6.03	2.41
	제 주	676,759	192.09	32.51	91.61	31.03	8.87	4.43	2.96	20.69
총계		51,638,809	60.9	23.39	17.6	5.52	3.35	5.17	4.47	1.32
2	수도권	26,023,283	44.27	21.25	11.07	4.11	1.5	3.15	2.54	0.5
	지 방	25,615,526	77.8	25.57	24.24	6.95	5.23	7.22	6.44	2.15
총계		51,638,809	60.9	23.39	17.6	5.52	3.35	5.17	4.47	1.3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 생활문화센터

1) 설립 취지 및 개요

생활문화센터는 2013년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와 생활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지원사업'의 명칭을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바꾸면서 본격화되었다.

2014년 생활문화센터 착수 당시 문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으로, '그동안 도시 발전, 생활방식, 정주 인구의 변화 등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지역의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목욕탕, 폐교, 모텔, 주민센터, 승마장 등의 유휴시설을, 해당 시설이 갖고 있는 시·공간적 의미를 살리며 친근한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시설이다(문체부, 2014).

생활문화센터 조성 자체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으로, '2014년 12개 광역 지자체(기초 26개)의 31개 시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사업비(97억 원)를 지원(문체부, 2014)'하였으며, 국고 지원 사업이 종료된 2020년까지 공간 조성에 600억 원 이상을 집행하였다. 현재 사업 운영비는 90% 이상 지방비로 집행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 지역 간 문화 격차, 지역 내 노후 유휴시설 활용 문제 등 여러 지역 문제와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확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에 총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문화 사업 주관 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정책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등 생활문화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그 맥을 같이 하고는 있으나, 과거 공간보다는 보다 발전적 형태를 지향한다 할 수 있다[15].

---

15) 자료: 생활문화센터 조성길잡이(2017), 지역문화진흥원.

2) 일반 현황

[그림 4-2]는 생활문화센터수와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생활문화센터 수를 표시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20개로 가장 많고, 인구 백만 명당 생활문화센터 수로는 강원이 11.05개로 가장 많다. 생활문화센터의 지역별 현황은 [표 4-4]와 같다.

[그림 4-2]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생활문화센터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역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조성된 곳이 104개소로 전체의 60.1%였으며, 복합시설 69개소(39.9%)보다 많았다. 전체 운영 인력은 358명[16]으로, 시·도 지역별 평균 운영 인력은 21.1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39개(22.5%), 비수도권은 134개(77.5%)로 수도권 지역에서 복합 공간(24개)이 단독 공간(15개)보다 많다.

쇠퇴지역과 비쇠퇴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쇠퇴지역이 113개소(65.3%)로, 비쇠퇴지역 60개(34.7%)보다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 이때 운영 인력 또한 쇠퇴지역(238명)이 비쇠퇴지역(120명)보다 약 2배 많다. 그러나 도시 규모별로는 공간 유형이나 인력 현황에 큰 차이가 없다.

---

16)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개요표와 세부 실태와 상이한 내용을 세부 실태에 맞춤. (대구: 18→22, 세종: 6→3, 경기: 55→58로 수정)

[표 4-4] 전국 생활문화센터 개요 (명, 개)

구분	지역	생활문화센터	공간 유형		운영 인력 수
			단독	복합	
1	서 울	8	6	2	35
	부 산	20	10	10	29
	대 구	11	6	5	22
	인 천	12	5	7	19
	광 주	8	5	3	19
	대 전	4	1	3	8
	울 산	3	3	-	5
	세 종	2	2	-	3
	경 기	19	4	15	58
	강 원	17	14	3	26
	충 북	4	4	-	11
	충 남	9	4	5	12
	전 북	16	14	2	50
	전 남	10	5	5	16
	경 북	10	6	4	19
	경 남	14	9	5	25
	제 주	6	6	-	1
총계		173	104	69	358
2	수도권	39	15	24	112
	지 방	134	89	45	246
총계		173	104	69	358
3	쇠퇴지역	113	68	45	238
	비쇠퇴지역	60	36	24	120
총계		173	104	69	358
4	대도시	68	38	30	140
	중소도시	64	36	28	129
	비도시	41	30	11	89
총계		173	104	69	35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참고로 재구성

※ 지역별 운영 인력 현황 세부 실태에 맞춰 오류 수정 (대구: 18→22, 세종: 6→3, 경기: 5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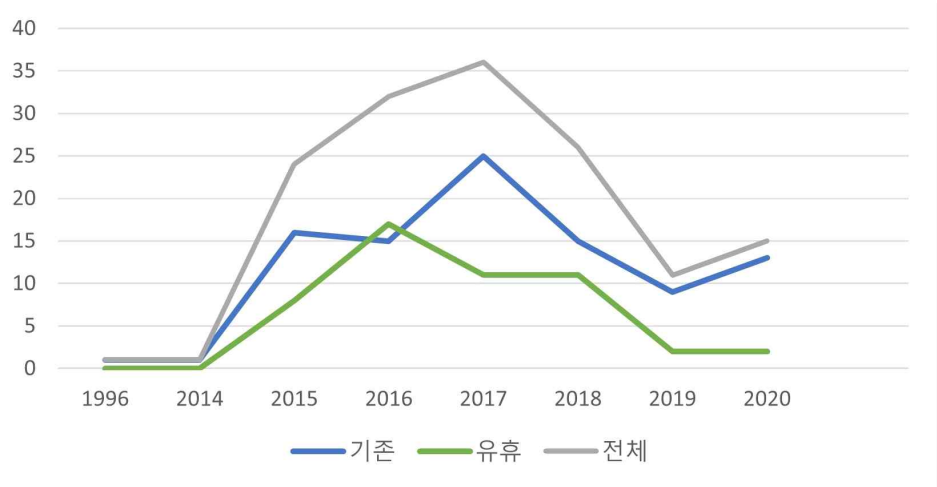
3) 공간 조성 방식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조성 방식은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존'과 지역의 노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유휴', 두 가지로 나뉜다. 2020년 기준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는 95개소이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는 51개소이다.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유형은 국비 지원 사업이 진행된 2020년까지는 기존-유휴로 분류하였으나(2021년 총람), 2021년에는 공간의 형태에 따라 단독-복합으로 분류하여, 2021년 새롭게 조성된 생활문화센터 27곳의 기존-유휴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2022년 총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휴공간의 분석은 2021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3]는 개관연도별 공간 조성 방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17]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4-3] 공간 조성 방식별 개관 연도



17)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4-2]에 1996년으로 표시된 곳은 창원 중앙평생학습센터로, 생활문화센터 개관이 아닌 기존 평생학습센터의 개관일을 오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 항목에 대한 해석이 작성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일관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별 조사 항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2020년까지 기존 95개, 유휴 51개 총 146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연평균 기존 11.9개, 유휴 6.4개, 총 18.3개씩 조성되었다.

또,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경우, 단독 46개, 복합 49개로 공간 유형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휴공간은 단독 41개, 복합 10개로 단독 건물의 비율이 높다.

[표 4-5] 공간 조성 방식별 개관 연도

구분	199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합
기존	1	1	16	15	25	15	9	13	95
유휴	-	0	8	17	11	11	2	2	51
총합	1	1	24	32	36	26	11	15	146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표 4-6] 공간 조성 방식별 공간 유형

구분	단독	복합	총합
기존	46	49	95
유휴	41	10	51
총합	87	59	146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4) 지역 특성별 현황

생활문화센터는 대도시, 중소도시 등 75% 이상이 도시에 분포돼 있다. 지역적 특성이 생활문화센터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현황을 도시규모, 수도권 여부, 도시쇠퇴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도시쇠퇴 여부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분석지표 개방데이터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지표를 참고하였다.[18)]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는 대도시 34개소, 중소도시 33개소, 비도시 21개소 등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비수도권과 쇠퇴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4-2]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많고, 쇠퇴지역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적으며, 생활문화센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쇠퇴지역과 비쇠퇴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7] 지역 특성별 생활문화센터 현황

	대도시(n=68)		중소도시(n=64)		비도시(n=41)		총합
	비쇠퇴	쇠퇴	비쇠퇴	쇠퇴	비쇠퇴	쇠퇴	
비수도권	14	34	13	33	19	21	134
수도권	5	15	8	10	1	0	39
총합	19	49	21	43	20	21	173

[표 4-7]에 의하면, 기존 문화시설은 유휴공간에 비해 비수도권-대도시 및 중소도시 비중이 높으며, 지역별 편중이 크다. 공간 유형별로는 비수도권-농어촌 지역의 단독 건물 비중이 높고, 기존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는 복합공간은 수도권-대도시 및 중소도시 비중이 높다. 운영 방식별로는 위탁은 쇠퇴지역-중소도시 비중이 높고, 직영은 비수도권-대도시 비중이 높으며, 자율운영 방식은 100% 비수도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별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19]

18) 도시쇠퇴 여부가 생활문화센터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과거 대비 사업체수 변화율, 최근 사업체수 연속 감소년수 등 산업·경제 관련 변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생활문화센터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내용은 [부록 표2]에 수록하였다.

19) 공간 조성 방식(기존-유휴)에 따른 도시규모 및 비수도권-수도권, 쇠퇴-비쇠퇴지역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지역 특성별 공간 조성 방식

조성 방식	도시규모			수도권		도시쇠퇴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도권	비수도권	쇠퇴지역	비쇠퇴지역	
기존	40 42.1%	37 38.9%	18 18.9%	17 17.9%	78 82.1%	65 68.4%	30 31.6%	95 100%
유휴	18 35.3%	19 37.3%	14 27.5%	13 25.5%	38 74.5%	32 62.7%	19 37.3%	51 100%
계	58 38.7%	56 38.4%	32 21.9%	30 20.5%	116 79.5%	97 66.4%	49 33.6%	146 100%

※ 2021년, 생활문화센터 146개소

[표 4-9] 지역 특성별 공간 유형

공간 유형	도시규모			수도권		도시쇠퇴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도권	비수도권	쇠퇴지역	비쇠퇴지역	
단독	38 36.5%	36 34.6%	30 28.8%	15 14.4%	89 85.6%	68 65.4%	36 34.6%	104 100%
복합	30 43.5%	28 40.6%	11 15.9%	24 34.8%	45 65.2%	45 65.2%	24 34.8%	69 100%
계	68 39.3%	64 37.0%	41 23.7%	39 22.5%	134 77.5%	113 65.3%	60 34.7%	173 100%

※ 2022년, 생활문화센터 173개소

[표 4-10] 지역 특성별 운영 방식

운영 방식	도시규모			수도권		도시쇠퇴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도권	비수도권	쇠퇴지역	비쇠퇴지역	
위탁	27 32.1%	40 47.6%	17 20.2%	27 32.1%	57 67.9%	60 71.4%	24 28.6%	84 100%
직영	39 52.0%	16 21.3%	20 26.7%	12 16.0%	63 84.0%	46 61.3%	29 38.7%	75 100%
자율	2 14.3%	8 57.1%	4 28.6%	0 0.0%	14 100.0%	7 50.0%	7 50.0%	14 100%
계	68 39.3%	64 37.0%	41 23.7%	39 22.5%	134 77.5%	113 65.3%	60 34.7%	173 100%

※ 2022년, 생활문화센터 173개소

5) 운영 특성별 현황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주체에 따라 민간 위탁, 지자체 직영, 주민 자율로 나뉜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수록된 시설별 운영 주체 현황은 지자체, 재단, 개인 등 개별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구분이 일정치 않았다. 이에 2020년, 2021년 총람에 수록된 기준을 참고하여 [표 4-10]과 같이 위탁, 직영, 자율 3가지로 분류하였다.

2021년 기준 생활문화센터 146곳을 운영 주체별로 분류하면 위탁 67개(45.9%), 직영 63개(43.2%), 자율 16개(11.0%)이다. 2022년 기준 생활문화센터 173곳을 운영 주체별로 분류하면 위탁 84개(48.6%), 직영 75개(43.4%), 자율 14개(81%)로, 전년도에 비해 위탁 17개 증가, 직영 12개 증가, 자율 2개가 감소하였다.

[표 4-11]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식

구분		2022년 총람 기준 운영 주체	2021		2022	
			개수	소계	개수	소계
위탁	공공위탁	충주중원문화재단	67	67	1	84
	공기관대행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1	
	공기관위탁	용인문화재단, 화성시 문화재단			2	
	기타(민관협력운영)	양주시/장흥오라이			1	
	민간위탁	기분좋은큐엑스(주), 한국문화기획학교 및 지역문화재단			68	
	위탁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지역문화재단 등			10	
	출연기관 사무대행	(재)원주문화재단			1	
직영	직영	시군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문화재단 등	63	63	75	75
자율	주민자율	마을위원회	13	16	13	14
	직영/주민자율	임계 주민자치위원회	2		0	
	주민자율/민간위탁	※ 2021년, 부산 영도구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1		1	
계			146		173	

운영 방식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목할 점은 위탁, 직영, 자율 등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 인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생활문화센터 전체의 평균 운영 인력은 2.05명이지만, 위탁 운영하는 곳의 평균 운영 인력은 2.83명으로, 직영 1.37명, 자율 0.93명에 비해 1명 이상 많았다.[20]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운영 인력이 더 많다기보다 위탁 운영 방식의 경우, 전담 인력 외 겸직 인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2] 운영 방식별 생활문화센터 현황

구분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			총합
	위탁	직영	자율	
생활문화센터 (개)	84	75	14	173
운영 인력 (명)	238	103	13	354
평균 운영 인력 (명)	2.83	1.37	0.93	2.05

공간 유형에 따라서는 독립형(건물 전체형/단독)과 공동형(건물 일부형/복합)으로 구분된다. 독립형은 건물 전체가 생활문화센터로 사용되는 유형이고, 공동형은 건물 일부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타 시설과 공존하는 형태이다.[21] 공간 유형에 따른 운영 인력은 단독 2.13명, 복합 1.93명으로 단독이 조금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 4-13] 공간 유형별 생활문화센터 현황

구분	공간 유형에 따른 분류		총합
	단독	복합	
생활문화센터 (개소)	104	69	173
운영 인력 (명)	221	133	354
평균 운영 인력 (명)	2.13	1.93	2.05

20) 위탁과 직영 2가지 운영 방식에 따른 운영 인력 현황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지역문화진흥원. (2021). 「2021생활문화센터 조성길잡이」, 지역문화진흥원. p.11

6) 기초 통계

운영 특성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4-14] 생활문화센터 운영 특성 기초 통계

주요 변수	obs	min	max	N	SD
연간 예산(천 원)	150	2000	1324919	131245.5	188899.4
	132	2000	246075	75972.7	62769.0
면적(㎡)	172	33	741365	6091.8	57997.3
	156	33	1470	608.8	344.3
운영 인력(명)	167	0	10	2.1	1.6
	158	0	5	1.9	1.1
프로그램수(개)	156	0	399	18.8	46.0
	123	1	26	8.0	6.0
이용자수(명)	163	0	120000	6480.7	12364.5
	145	50	14053	3596.5	3599.1

(2022년 기준, N=173)

① 연간 예산

먼저, 연간 예산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약 13억 2,491만 원으로 나타나 센터별로 상당히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평균 예산은 1억 3,125만 원(SD=1억 8,890만)으로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약 2억 7천만 원 이상의 이상치(Q3+IQR) 18개를 제외하면 연간 평균 예산은 약 7,597만 원(SD=6,277만)으로 평균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만, 표준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은 지방비, 국비, 기타 자체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2021년 기준 전체 예산의 92.25%가 지방비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을 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대부분 운영비이며, 월평균 운영비는 약 1,093만 원, 이상치를 제외한 132개의 생활문화센터의 월 운영비는 이보다 적은 약 630만 원으로 현재의 소규모 문화체험 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금액이다.

② 면적

면적은 최소 33㎡에서 최대 741,365㎡이며 센터별로 격차가 크다. 평균 면적은 6,091.8㎡(SD=57,997.3)으로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적이 1,550㎡ 이상인 이상치(Q3+IQR) 16개를 제외한 평균 면적은 608.8㎡(SD=344.3)이다.

③ 운영 인력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인력은 아예 없거나 최대 10명까지로, 평균 2.1명(SD=1.6)이다. 운영 인력이 6명 이상인 이상치(Q3+IQR) 9개를 제외해도 평균 1.9명(SD=1.1)이며, 대부분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운영 인력이 많은 곳은 대부분 위탁 운영 기관이다. 이는 겸직 인력까지 포함한 수치로, 실제 전담 인력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수는 아예 없거나 최대 399개인 것으로 나타나며 센터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프로그램 수는 18개(SD=46)로,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 이는 자료를 취합하던 2021년 당시 팬데믹의 영향으로 운영을 중단한 생활문화센터도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가 0이거나 27개 초과인 이상치(3Q+IQR)를 제외하면, 프로그램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26개, 평균은 8개(SD=6)으로 분석된다.

⑤ 이용자 수

이용자 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12만 명으로 나타나 센터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평균은 6,480.7명(SD=12,364.5)으로 분석되어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팬데믹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용자 수가 0이거나 14,134명이 넘는 이상치(3Q+IQR)를 제외한 결과, 최소 50명에서 최대 14,053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용자 수는 3,596.5명(SD=3599.1)으로 여전히 표준편차가 크다.

7)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의 차이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에 지역 특성과 운영 특성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22]

분석 결과, 도시쇠퇴 여부, 수도권 여부, 도시 규모 등 지역 특성별 변수와 운영 방식, 예산, 면적, 운영 인력,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 등 공간 유형을 제외한 모든 운영 특성별 변수에 대해 기존 문화시설과 노후 유휴공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간 유형은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할 때 단독과 복합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유휴공간일 때 단독이 복합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는데, 이는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대개 지자체 건물의 일부나 부속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공간 유형을 제외하고는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와 노후 유휴공간을 재생한 생활문화센터 사이에 지역적 특징이나 운영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 문화시설 활용과 비교했을 때, 유휴공간의 정체성이나 공간적 특성은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 운영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생활문화센터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써 그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생활문화센터로 활용된 본래의 유휴공간이 역사적 의미나 보존 가치가 높거나 공간적 특색이 뛰어난 곳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2) [부록 표3], [부록 표4], [부록 표5] 참고

8) 주요 사업 내용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정책 사업의 핵심 공간으로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4-15]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내용
운영기반 구축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조직 구성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비전을 찾는 프로그램
	기타
운영 모델화 구축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기획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거점 플랫폼 구축	지역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

출처: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2022).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실질적인 사업은 생활문화센터가 추진한다(지역문화진흥원, 2021).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원에 국고를 교부하면, 생활문화센터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화진흥원은 교육·컨설팅·모니터링·우수프로그램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관리한다(지역문화진흥원, 2021).

[그림 4-4]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체계

출처: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지역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 활성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지역문화진흥원, 2022).

[표 4-15]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타 시설과 차별화되는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4-16]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도	참여 센터수 (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	운영 (회)	지원규모 (천원)
2020	33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사회 환경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 프로그램,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등	89	492	467,000
2019	31	공동체 형성 및 강화 프로그램,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그램, 공간개선 프로그램, 인지도 확산 프로그램 등	73	769	440,000
2018	22	업사이클, 생활문화축제, 동아리 네트워킹, 공간개선 활동	57	476	209,929
2017	13	마을축제, 생활문화강좌, 주민기획회의, 공간개선 활동 등	65	241	126,844
2016	9	생활문화센터 동호회연합회 워크숍, 문화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이용자 수요 조사, 운영방안 수립 연구 등	25	82	64,887
2015	42	이용자 수요 조사, 생활문화선진지 견학,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생활문화 마을장터 등	45	181	574,242
2014	25	이용자 수요 조사, 선진지 견학, 네트워킹, 주민작품 전시회, 문화매개활동가 양성 등	29	125	438,100

출처: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원출처: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rcda.or.kr/2020/business/index.asp#n)

9) 문제점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과 함께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주민 간 문화 여가 활동을 매개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대외적 목표와 실제 수단, 정책 추진을 통해 향후 이루고자 하는 내재적 목적은 제각각이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실태를 통해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목표-수단-목적을 [그림 4-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활문화센터가 설립된 실질적인 배경은 지역 내 처치 곤란한 노후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휴공간에서 문화를 매개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생활문화센터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5]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목표-수단-목적

그러나 생활문화센터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타 문화기반시설과 크게 차별화된 부분이 없다.

이런 가운데 동호회 연합회 활동이나 생활문화축제 같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동호회 간 교류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에 생활문화센터가 꼭 필요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생활문화 정책에 드러나는 목표-수단-목적으로서의 문화의 개념을 실현하기에는 실제 생활문화센터의 규모, 예산, 인력, 프로그램은 변변찮은 수준이며, 생활문화센터 대부분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주민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라기보다 그저 남는 공간에 구색만 끼워 맞추는 데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지역문제 해결은커녕 이용자 수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애초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도 아니고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없으니, 참여는 저조하고, 공간은 다시 쓸모를 잃어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든 생활문화 관련 사업은 여전히 인지도도 낮고, 생활문화센터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연구 및 토론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이는 선후 관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9년째 제자리걸음인 생활문화센터를 굳이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2014년 생활문화센터 착수 당시 문체부는 유휴시설의 '시·공간적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위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9년간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연구 결과

1. 문헌 조사

이번 장에서는 문헌 조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지역 사회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1) 노후화된 유휴공간 개선

생활문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들의 일상적 만남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생활문화 정책의 핵심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그동안 도시 발전, 생활방식, 정주 인구의 변화 등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거나 사업이 되어 지역의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유휴시설(문체부, 2014)'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우선 과제인 듯하다.

2020년 기준 전국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는 총 51곳으로, [표 5-1]는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 2021)〉을 바탕으로 〈2017~2018 개관 생활문화센터 공간 안내서 「공간, 공감」(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2018)〉와 해당 생활문화센터의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 등을 참고하여 건물의 원래 용도를 정리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의 특징은 [표 5-2]와 같다. 지역적 특징으로는 비수도권 비율이 수도권보다 많으며,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비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다. 공간 유형은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경우보다 유휴공간의 단독 건물 비율이 복합 건물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방식은 위탁/직영/자율의 비율이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1]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

구분	지역	센터명	운영 방식	공간 유형	개관 연도	본래 용도	
						이전 시설	분류
수도권	서울	서울 체부	민간위탁	단독	2018	교회	역사
		천연 어울림	직영	단독	2020	지하도	기타
		가산	직영	단독	2017	창업지원정보센터	행정
		은평	민간위탁	복합	2017	음악정거장	문화
	인천	솔마루	직영	단독	2016	시장 상인 쉼터	문화
		진달래	민간위탁	복합	2017	지하도	기타
		북도면	직영	복합	2018	면사무소	행정
	경기	경기	위탁	복합	2016	서울대 부지	폐교
		창룡 마을창작센터	직영	단독	2015	목욕탕	기타
		보정역	공기관위탁	단독	2016	광역철도 임시역사	기타
		화성시	공기관위탁	복합	2017	화성종합경기타운	기타
		군포	위탁	복합	2019	상가	기타
		777	민관협력	복합	2015	폐모텔	기타
비수도권	부산	수영구	직영	단독	2016	문화원	문화
		두송	직영	단독	2015	목욕탕	기타
		부산 한성1918	민간위탁	단독	2018	최초의 근대은행	역사
		범일	직영	단독	2016	주민센터	행정
		좌천	직영	단독	2017	은행	기타
	대구	달서 송현점	민간위탁	단독	2016	예비군 훈련장	기타
		서재 행복	직영	단독	2016	서재보건진료소	보건
	광주	전일	민간위탁	단독	2020	전일빌딩	역사
	울산	울주	민간위탁	단독	2016	면사무소	행정
		중구	직영	단독	2016	전통공예관	문화
	세종	조치원	직영	단독	2016	여성회관	문화

	강원	임당	민간위탁	단독	2016	동사무소	행정
		동해	민간위탁	단독	2016	시청 민방위대피소	행정
		한반도	직영	단독	2016	아파트 복지회관	문화
		덕포	민간위탁	단독	2017	영월 화력발전소	기타
		달빛	민간위탁	단독	2018	덕거초등학교	폐교
	충북	청주	민간위탁	단독	2017	연초제조창 창고	기타
		충주	공공위탁	단독	2016	동사무소	행정
		괴산	민간위탁	단독	2015	향토사자료전시관	문화
	충남	웅천	직영	복합	2016	읍사무소	행정
		태안	직영	단독	2018	문화원	문화
	전북	정읍시	민간위탁	단독	2017	일제 도정공장 창고	역사
		구이	민간위탁	단독	2016	면사무소	행정
		동상	민간위탁	단독	2017	보건지소	보건
	전남	순천 영동1번지	민간위탁	단독	2018	군청	행정
		광양시	직영	복합	2018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행정
		계곡	직영	단독	2018	보건지소/노인회관	보건
		문내	직영	단독	2015	면사무소	행정
	경북	구룡포	민간위탁	복합	2017	동부초등학교	폐교
		상주시	직영	단독	2015	자전거박물관	문화
		경산	직영	단독	2019	도서관	문화
		군위	민간위탁	단독	2018	군위 중학교	폐교
		영덕	직영	단독	2015	문화원	문화
	경남	백산마을	주민자율	단독	2016	백산 초등학교	폐교
		남해	직영	단독	2017	노인복지관	문화
		악양	민간위탁	단독	2018	축지 초등학교	폐교
		하성 단노을	주민자율	단독	2015	하성 초등학교	폐교
	제주	우도면	직영	단독	2018	남훈문학관	문화

[표 5-2]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의 특징

지역	비수도권	38	공간 유형	단독	41
	수도권	13		복합	10
도시 규모	대도시	18	운영 방식	위탁	26
	중소도시	19		직영	23
	농어촌	14		자율	2
개관연도	2015	8	본래 용도	문화	13
	2016	17		행정	12
	2017	11		보건소	3
	2018	11		폐교	7
	2019	2		역사	4
	2020	2		기타	12

※ 2020년 기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총 51개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전 유휴공간의 본래 용도는 교회, 폐모텔, 지하도, 목욕탕, 폐교, 면사무소 등 다양하다. 이를 공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문화(13)/행정(12)/보건소(3)/폐교(7)/역사(4)/기타(12)로, 문화원이나 복지회관 등 현재 생활문화센터와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문화공간이나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등 지역 내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대부분 기존 공공시설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유휴공간이다. 이들은 대체로 시설은 노후화되었으나 한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한편, 문체부에서 언급한 '시·공간적 의미'가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5·18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된 전일빌딩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주민들의 추억이 어려있는 폐교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폐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폐교가 늘자 지역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된 공간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종합해 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역사적·문화적 보존 가치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을 되살린다기보다는, 주로 장기간 방치돼 매각하기 쉽지 않은 이른바 '애물단지' 공간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생활문화정책은 [표 5-3][23]와 같이 기존 문화시설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600억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문화센터 고유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등 다른 문화기반시설이나 지자체 및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존 문화예술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표 5-3] 생활문화센터와 타 문화시설과의 차별성

구분	기존 문화시설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목표	관람 위주의 문화서비스 제공	주민들의 체험 · 창작활동 지원
조성방식	신규 건립 방식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방식 &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 방식
	관위주의 Top-down approach (일방적 공급)	민간중심의 Bottom-upapproach (자율적 공급)
	획일적 시설구성 및 지원방식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시설 구성 및 지원
운영방식	공공 소유 및 공공 운영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운영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강좌형-관람형 프로그램 중심	동호회 등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제공 체험 및 창작 프로그램 중심
인력운영	전담인력 중심	주민강사 및 지역활동가 양성
지원방식	건립비만 지원	리모델링 비용, 시설 및 기자재 비용 지원
이념	문화의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자율성, 공공성, 자생성(지속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23) 문화체육관광부. (2014), “생활문화로 여는 문화융성 시대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조성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6월 10일자).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본 방향 참고

기존의 문화시설이 문화강좌나 감상 등 이용자의 수동적 참여 중심이었다면, 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 연습 공간이나 주민 모임 활동 등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강연 비중이 높은 곳이 많다. 이는 생활문화 정책이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나 문화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홈페이지와 온라인상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들여다보면, 오케스트라나 음악, 밴드처럼 장르가 특화돼 있거나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근처에 있어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우였다.

단순히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마을공동체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타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내용이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프로그램만으로는 생활문화센터 고유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표 5-4] 주요 문화기반시설 개요

구분	개요
생활문화센터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틀 마련 읍·면·동사무소, 문화원, 폐교 등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 생활문화의 거점이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지역문화원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1950년대에 자생적으로 설립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정을 통해 각 시·군·구별 1개소 설치 지역 고유의 문화 계발·보급·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타 문화 활동
문화의집	마을 단위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주민 문화여가 활동 증진 문화예술 체험, 교육, 창작, 소모임 등 마을 문화거점 역할, 현재 감소 추세 대부분 동사무소, 주민회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
문예회관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및 전시, 주민 문화예술 교육 등 다목적 문화공간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1개의 문예회관 건립

공간 조성이 일정 규모로 추진된 후로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인력 배치 지원 등 사업 내용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예산 규모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지역문화진흥원, 2019).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공격적으로 센터 수를 늘려온 것에 비하면,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체부가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공연장 등 14개의 문화예술공간에 대해 실시한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5%였다. 전체 문화시설에 대해 1회 이상 이용한 응답자가 38.3%,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1.7%인데 반해, 생활문화센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4)]

생활문화 개념의 모호함, 타 문화시설과의 유사성, 낮은 인지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생활문화의 활동 주체를 주로 동호회나 동아리로 한정하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참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동호회 중심의 활동 지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정편의주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새로운 모임을 기획하고 모집하는 것보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이 운영이나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 조사〉[25)]에 따르면, 생활문화 운영 방향의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도 극명하다.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민은 평균연령

---

24) 표본 10,139명(남: 4,577명, 여 5,562명) 대상, 문화예술공간 이용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 경험 없음' 응답 비율 - 주민자치센터(80.6%), 민간공연장(83.3%), 도서관(94.2%), 박물관(94.8%), 시군구민회관(95%), 사설문화센터(96.6%), 복지회관(96.9%), 문예회관(97.8%), 생활문화센터(98.5%), 청소년회관(98.8%), 문화원(99.3%),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99.5%), 문학관(99.6%), 문화의집(99.8%)
※ 문화체육관광부.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예술공간이용 횟수-생활문화센터 외, (참조일자: 2023.06.23.)

25) 지역문화진흥원. (2022).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p.291

이 높아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없으며 생활문화지원사업 등의 공모를 참여하는 행정력이 부재'하다(지역문화진흥원, 2022).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 수를 늘려왔으나, 정작 지역민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고 행정력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이처럼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던 사람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고 지역 간 격차도 벌어지는 것이라면 생활문화센터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다.

3)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하였으며(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2018),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총 1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지역당 1억 5천만 원~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심사 총평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다양한 지역단체가 공모에 지원하여 주민 주체의 활동 장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나, 여전히 ‘생활문화 활동을 동아리 활동 확대 및 강화로 해석하거나 협력단체가 활동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등 생활문화 활동을 프로그램 수강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다(지역문화진흥원, 2023)’며, 주관단체가 ‘생활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협력단체와 논의·협력하는 과정이 향후 꼭 필요(지역문화진흥원, 2023)’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등 생활문화 4개 단위사업 운영자 총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생활문화 사업 운영자들은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해 [그림 5-1]과 같이 응답하였다.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한 사업 운영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1순위 응답 기준, ‘생활문화는 개인적 활동이 아닌, 공동체 또는 동호회 등 함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생활문화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29.2%), ‘생활문화는 예술활동과는 다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일상적인 문화활동이다’(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문체부, 2022).

생활문화 사업의 목적을 개인, 공동체, 사회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공동체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다.

[그림 5-1] 생활문화 정의에 관한 운영자 설문 결과

출처: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2022). p.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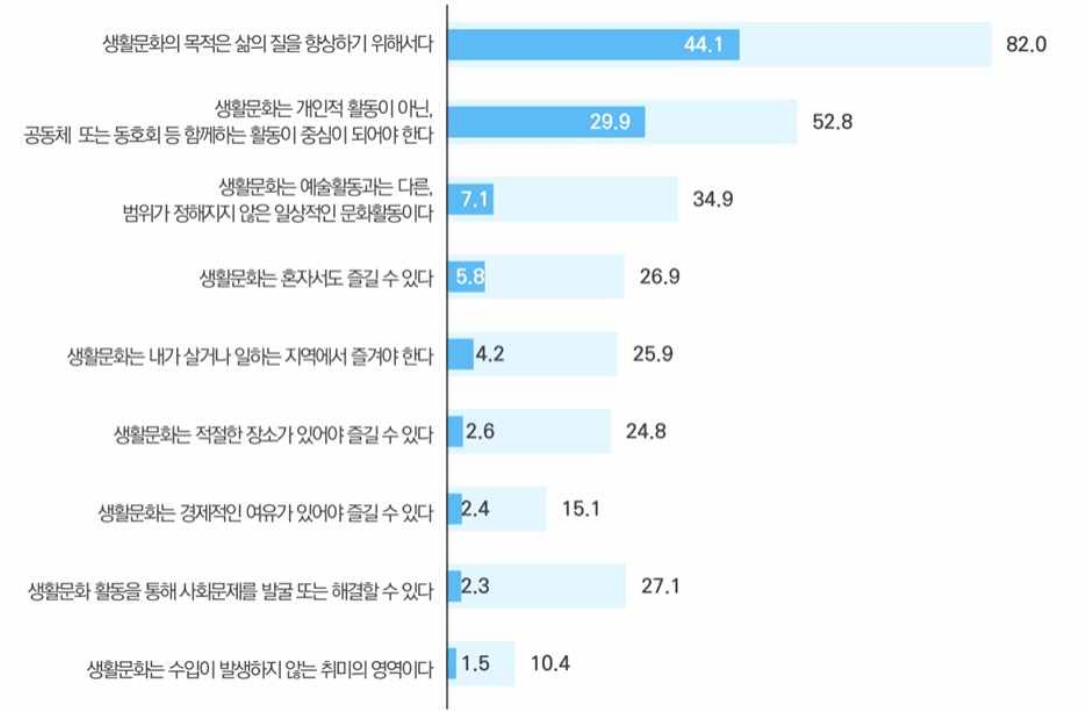
(n=106, 복수응답, 단위: %)

* 1순위 기준 내림차순

전체 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생활문화는 예술활동과는 다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일상적인 문화활동이다'(64.2%),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발굴 또는 해결할 수 있다'(5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문체부, 2022). 생활문화 정의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은 일상, 삶의 질 향상 등 개인적 차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체 순위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발굴 또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세 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사회문제와 관련한 항목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적지만, 전체 순위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운영자들 사이에는 생활문화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총 1,2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21년 생활문화사업 참여자 및 관람객들은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해 [그림 5-2]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림 5-2] 생활문화 정의에 관한 참여자 및 관람객 설문 결과

출처: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2022). p.150

(n=1,249, 복수응답, 단위: %)

* 1순위 기준 내림차순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한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1순위 응답 기준, '생활문화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44.1%), '생활문화는 개인적 활동이 아닌, 공동체 또는 동호회 등 함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29.9%)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순위를 기준으로도 '생활문화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82.0%), '생활문화는 개인적 활동이 아닌, 공동체 또는 동호회 등 함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52.8%), '생활문화는 예술활동과는 다른, 범

위가 정해지지 않은 일상적인 문화활동이다'(34.9%) 등의 순으로 1순위 응답 기준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은 운영자들의 응답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

또 다른 자료 〈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9.1%가 타 시설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생활문화센터 이용 목적은 문화프로그램 수강 및 참여가 47.5%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동호회 활동 참여(2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현재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지역성이 반영된 프로그램도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커뮤니티 중심보다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유사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거창한 정책 비전과는 달리 실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다른 문화기반시설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책 비전으로 인해 생활문화 개념에 대한 운영자와 이용자의 이해도도 낮다.

생활문화 개념에 대한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단조롭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생활문화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2. 사례 조사

사례 조사 대상지는 모두 폐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수도권-대도시-비쇠퇴지역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기 생활문화센터와 비수도권-농어촌-쇠퇴지역에서 주민자율로 운영되는 백산 생활문화센터를 선정하였다.

1) 경기 생활문화센터

① 노후화된 유휴공간 개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위치한 경기 생활문화센터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후, 광역문화재단 중 가장 먼저 생활문화팀을 신설하는 등 생활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앞장서 구축해 왔다.

[표 5-5] 경기상상캠퍼스 연혁

1907	농림학교 수원 이전	2015	경기상상캠퍼스 조성 시작
1946	서울대학교 농업대학으로 설치, 병합	2016	경기상상캠퍼스·경기생활문화센터 개관 생활1980, 생생1990 오픈
200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2017	청년1981, 공작1967 오픈
2008	농업생명대학 시민에게 숲 개방	2018	공간1986 오픈
2012	도유지 경인교대 부지와 국유지와 서울농생대 부지 교환	2019	교육1964 오픈
2013	농업생명대학 완전 개방, 산책로 조성	2020	디자인1978 오픈

출처: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경기상상캠퍼스는 2003년 경기도 수원시에 있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캠퍼스 부지의 절반을 경기문화재단에서 매입하면서 마련된 곳으로, 매입 후 약 10년 후인 2016년 6월, 방치돼 있던 교정과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부지 매각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랜 기간 아무 관리 없이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이곳은 경기도가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약 57%를 넘겨받으며 수원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옛 서울 농생대 부지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근대 농업발전의 중심이자, 1930년대부터 1990년대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다. 또한 2003년 서울대 캠퍼스 이전 후 폐쇄되어 수림이 자연 상태로 보존된 희귀한 식생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기도 하다(강식 외, 2012).

[그림 5-3] 경기도 부지와 서울대 부지 (출처: 안국진(2018), p.6 재구성)

서울대 부지 쪽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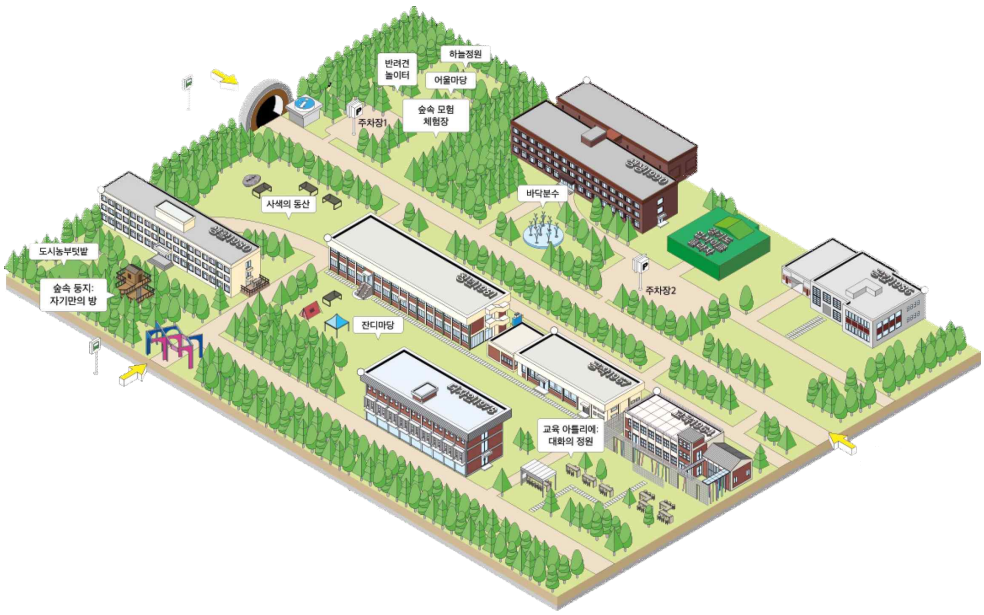
중앙 도로

양쪽 부지를 분리하는 펜스

[그림 5-4]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상상캠퍼스는 수원역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가로로 긴 직사각형 부지를 경기도와 서울대가 양쪽 출입구를 하나씩 끼고 공간

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형태다. 수원역에 가까운 주 출입구는 서울대 부지 쪽에 있다. 서울대 창업지원센터와 농생대의 연구 공간 겸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경기상상캠퍼스로 이용되고 있는 경기도 부지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는 일반 방문객들은 다소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 5-5] 경기도 부지 (출처: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현재 경기상상캠퍼스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본사가 이곳에 있으며, 생활문화뿐 아니라 청년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은 총 7개로, '생활1980, 생생1990, 청년1981, 공간1986, 공작1967, 교육1964, 디자인1978' 등 각 건물의 이름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한글 이름에 건물의 조성 연도를 조합한 것이다. 이 중 '생활1980'과 '생생1990'이 생활문화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건물은 문화예술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청년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때 SNS에서 여름철 공포체험으로 인기를 끌 만큼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이곳은 이제 새롭게 정비된 생태숲과 잔디 마당으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즐겨 찾는 휴식처가 되었다.

②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체 부지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상상캠퍼스는 [표 5-6]과 같이 매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간별 창업·창직, 생활문화, 융·복합문화, 손살이공방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표 5-6]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구성

구분		개요	입주공간
캠프	창업·창직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창직 개인 및 단체 육성	생활1980 청년1981 공작1967
	융·복합문화	기술, 미디어, 예술 등을 결합한 융합형 콘텐츠 기획(퍼포먼스, 공연, 인형극 등), 연출, 제작, 교육, 시연	공간1986
	생활문화*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육, 교재개발, 자체사업 기획·운영	생생1990
손살이공방*		생활문화 기반의 공예(판매, 유통), 체험, 개발 등 공방 운영	생활1980

출처: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생활1980'은 경기문화재단의 사무공간이자 경기상상캠퍼스의 중심 건물로, 어린이 책놀이터, 카페, 손살이공방 등 입주단체 공간과 문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생1990'은 어린이 책마루와 공유주방, 상상실험실(제작실), 생활창작공방(직물공방과 드로잉실),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과 동호회 및 입주단체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단체 연습 공간은 별도의 대관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체험, 축제, 공연 등을 비롯하여 주변 숲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와 협력한 프로그램 등 캠퍼스 내 인적·환경적 자원을 십분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26] 경기상상캠퍼스의 대표 프로그램 '포레포레'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플리마켓과 체험, 공연이 이루어진 축제 형태로, 클라이밍이나 짚라인 등 야외 체험과 영화 관람, 각종 체험과 푸드트

26) 출처: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럭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여가 많다. 또, 반려동식물 축제, 숲속 체험을 비롯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수원연극축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산책이나 나들이 온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생활문화센터만 따로 놓고 보면, 다른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경기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직물, 재단, 커피, 드로잉, 취미, 사진촬영, 어린이창작공방 등 7개의 공방을 기반'[27]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10명 이내의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원데이 클래스 등 강습 프로그램 위주다. 이마저도 경기문화재단 멤버십 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참여율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어린이나 주부, 가족 단위 방문객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온라인 활용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경기상상캠퍼스 전체로 보면, 생활문화와 청년문화 사업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참가자나 일반 방문객 입장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나들이하기 좋은 야외 공간과 편의 시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문화재단 기획 프로그램 외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만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났다고 보긴 힘들다.

③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경기생활문화센터는 경기도 생활문화 사업의 거점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31개 시군 생활문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광역형과 생활권형 기능 강화, 지역주민 활동 공간 운영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내의 생활문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28]하여 경기도형 생활문화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생활문화센터는 '2016년

27) 출처: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28) 출처: 경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16개, 2017년 17개, 2018년 18개, 2019년 32개, 2020년 23개, 2021년 17개, 2022년 7개'[29]의 생활문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축제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초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동호회 간 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등 생활문화 동호회 연계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둘째, 경기생활문화센터는 광역형과 생활권형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생활문화 전문가와 생활문화 활동가, 기관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협의체를 운영하고, 교류 및 연계 확산 지원사업 참여 기관 교류회, 경기도 31개 생활문화 기관 담당자들 간 정담회를 진행하여 지역 내 현안과 이슈를 다루는 등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향 및 정책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 해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생활문화 활동가 모집과 교육,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동호회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13세 이상, 3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동호회[30]'면 누구나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공간, 강의, 행사 참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기준, 가드닝, 교육, 생활기술, 공예, 미술, 무용, 생태, 악기 등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114개 동호회, 1,17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31]

경기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간 교류,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생활문화동호회는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나, 대부분 목공, 춤, 악기나 음악, 그림 등 특정 문화예술 장르에 국한된 취미 동호회 중심이며, 공동체나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활동도 드물다. 생활문화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고, 새로 동호회를 구성하기보다 기존에 활동하던 동호회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축제 개최나 각종 연계 활동으로 네트워킹 기회를 넓히고 있지만, 단순 취미 활동 중심이라서 지속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른다.

---

29) 출처: 경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30) 출처: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31) 출처: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2) 백산 생활문화센터

① 노후화된 유휴공간 개선

백산 생활문화센터는 경남 밀양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하나인 백산마을 금빛체험캠핑장에 자리 잡고 있다. 백산금빛체험캠핑장은 2014년에 폐교된 백산초등학교를 새롭게 단장하여 2016년 3월 생활문화센터로 개관한 곳으로, 마을 주민들의 모교이자 추억이 깃든 장소다. 2020년부터 캠핑장으로 운영하며 고령화된 백산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운동장에는 캠핑장이, 본관에는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별관에는 강당과 요리 공간이 있다. 경기상상캠퍼스처럼 폐교를 활용한 공간이지만, 비수도권-쇠퇴지역에서 주민 자율로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캠핑 인구가 700만 명에 달하는 등 캠핑이나 차박이 주요 여가 활동으로 굳어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약 1,500평 규모의 넓은 운동장과 주차 공간, 도서관과 모래 놀이터, 간이수영장, 트램펄린, 집라인, 축구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놀거리를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야영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림 5-6] 백산금빛체험캠핑장 (출처: 백산마을 홈페이지)

②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밀양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백산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생활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었다. 하지만 폐교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면서부터 마을공동체의 워크숍이나 회의 개최는 물론 공연, 영화관람, 음식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방문접수, 전화접수 모두 가능하며, 5세부터 성인까지 마을 주민과 캠핑장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에 맞는 영농체험과 공예 체험장, 도자기 체험장, 음식 체험장 등 주변 환경과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은 물론 밀양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참여도 대폭 늘었으며, 캠핑장을 찾는 가족 단위 야영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표 5-7] 백산생활문화센터 체험 프로그램

단체체험		영농체험	캠핑장 이용
가죽공방	가방, 지갑, 팔찌	딸기, 양파, 고추, 감자 수확체험	이용인원(4명) 이용요금 (1박 50,000원/ 2박 80,000원)
공예체험	냅킨아트, 도자기, 팬시우드, 종이공예		
원예체험	하바리움, 테라리움, 다육이 심기		
음식체험	피자, 궁중떡볶이, 제과제빵, 쿠키, 초콜릿 만들기		

출처: 백산마을 홈페이지

③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백산 생활문화센터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폐교를 임대하고, 주민 협의를 통해 마을 문화공동체인 백산두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산 생활문화센터는 '교육이나 강좌를 한다고 하면 주민이 부담스러워해 그림 그리러 오시라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등 친근한 방법으로'[32] 자연스러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동체 위기를 주민 참여로 극복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2) 출처: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38〉 밀양 백산마을, 국제신문. (2021년 8월 1일).

3. 소결

현재까지 집행된 중앙정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의 90.7%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33]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은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재단장하고, 2023년 4월 기준, 179개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는 생활문화의 기반 확충 측면에서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운영 주체별로 편차가 있다. 유휴공간도 대부분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서라기보다 쓸모를 다해 오래 방치된 공간이 대부분이었다. 타 문화시설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내용도 거의 없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다. 운영 주체와 이용자 모두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참여율도 저조하다 보니 동호회나 참가자 모집에 급급하여 지역 문제는 다루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특정 장르나 세대에 치우쳐 오히려 문화 격차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경기상상캠퍼스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면서 그 의미를 살렸으나, 야외 공간에 비해 건물 자체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실 겸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뿐, 입주단체나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지 않다. 경기생활문화센터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생활문화 사업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 관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생활문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의 횟수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되고 있다. 반면, 밀양 백산 생활문화센터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쇠퇴하고 있는 지역 문제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사례로, 생활문화 사업 본래의 취지에 비교적 잘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운영 주체의 역량에 따라 그 활성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

33) 출처: 2023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 토론회 자료집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현황(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 발표), p.6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를 통한 유휴공간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연구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문화기반시설이다.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의 지역 특성과 운영 특성별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문화'라는 용어가 지닌 함의와 '문화재생'이 굳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문헌 조사와 사례조사, 2022년 기준 전국 173개 생활문화센터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문화센터의 지역 특성별 현황이다. 생활문화센터 75% 이상이 도시에 있으며,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비수도권-쇠퇴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다른 문화기반시설과 비교해 최근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22.5%, 비수도권 77.5%로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비수도권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비해 공간 조성에 기능적 제약이 적고, 비교적 작은 규모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특성별 현황이다.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00억의 국비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92% 이상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평균 예산은 약 13,125만 원이며, 평균 면적은 6,091.8㎡, 평균 운영 인력은 2.1명, 연평균 프로그램 수는 18개, 연평

균 이용자 수는 6,480명이며, 센터별 격차가 크다. 운영 방식은 운영 주체에 따라 위탁, 직영, 자율로 구분되는데, 문화재단 같은 위탁 기관은 전담 인력 외에 겸직 인력을 포함한 숫자로, 실제 운영 인력은 1~2명 내외일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위탁 운영의 경우, 2~3년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의 업무 안정성이 낮으며, 업무 범위도 공간 운영이나 민원 대응, 행정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의 지역 특성별, 운영 특성별 차이를 실증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도시쇠퇴 여부, 수도권 여부, 도시 규모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간 유형(단독-복합)에 따른 차이 외에 운영 방식이나 예산, 면적, 운영 인력,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 등 운영 특성별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생활문화센터로 재탄생한 유휴공간이 사실상 기존 문화시설에 비해 별다른 특색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생활문화센터의 실질적 설립 목표 및 목적은 (1) 노후화된 유휴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조성, (2)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3)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등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실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할 명분만 있을 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생활문화 개념에 대한 인식도 달라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경기상상캠퍼스와 백산금빛체험캠핑장도 개방 공간이 중심이고, 생활문화센터 자체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사업 내용도 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주민 참여와 문제 인식에 따라 그 활성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생활문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속 가능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단순히 처치 곤란한 유휴공간의 환경 개선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 대상과 생활문화센터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의 힘’은 철거 예정지였던 통영의 빈민촌을 알록달록한 벽화로 되살아나게도 하기도 하고, 용도를 다한 성수동의 낡은 정미소를 각종 공연과 전시, 이벤트가 열리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하게도 만든다. 이처럼 특별한 성공 사례에 고무된 여러 정책이 ‘문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를 통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사적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휴공간을 재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관리가 안 된 벽화들이 흉물처럼 남은 곳도 많고,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며 대표적인 문화재생 사례로 손꼽히던 문화비축기지처럼 공간에 적합한 콘텐츠가 부족한 예도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에 들인 600억은 연평균 예산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전체의 3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센터당 월평균 운영비는 천만 원 남짓으로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운영자나 이용자가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생활문화’라는 모호한 개념까지 더해져 현장에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처음부터 사업 규모나 현실에 맞지 않는 거창한 목적에 집중한 나머지 공간을 채울 콘텐츠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지 않았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생활문화센터는 매월 천만 원 남짓한 운영비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누릴 수 있을지 소프트웨어를 고민해야 하는 신세다.

주민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대부분의 문화재생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패로 돌아갔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알기 쉬운 정책 자료를 통해 이용자와 운영 주체 모두 수긍할 만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처럼 앞으로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문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와 운영 계획을 세우고,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의 합리적인 프로그램으로 엄청

난 성공보다는 적당한 성공을 이뤄내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현대인의 여가 활동이나 문화 향유 방식도 고려하여야 한다. 바야흐로 양질의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다. 주위에 각종 문화시설은 넘쳐나고, 잘 나가던 영화관조차 더 이상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워졌지만, 한편에선 낙화하는 불꽃을 보기 위해 편도 11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인천에서 함안까지 가는 시대이기도 하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특색 있고, 목적 지향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이 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아닐 것이다.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들만 남았던 쓸쓸한 신안의 외딴섬 '퍼플섬'은 보라색이라는 컨셉을 잘 활용해 38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사계절 보랏빛 꽃이 피는 섬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꾼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좋은 사례다.

유휴공간 활용 방안도 다각화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고령화, 출생률 감소 등 도시쇠퇴와 관련된 문제는 산재해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던 80년대에 숨 가쁘게 쌓아 올린 건물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 쓸모를 잃고 계속 비워지고 있다. 건물뿐 아니라 골목 전체가 비기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휴공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도 웃음꽃은 피고, 드넓은 꽃밭도 때가 되면 사람이 몰리듯 빈 곳을 꼭 채울 필요는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상징적인 도시 영스타운은 한때 제조업 중심지로 융성하였으나,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및 등의 여파로 지역을 견인했던 강철 산업이 몰락하자 급격히 쇠락하였다.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 비해 인구가 절반 넘게 감소한 영스타운은 문화적 전략을 택하는 대신 도시의 쇠퇴를 받아들이고, 버려진 주택을 철거하고 공원이나 대형 주차장 같은 개방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도시쇠퇴의 흐름을 막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택한 것이다. 하버드대 도시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는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에서 미국 영스타운의 이러한 빈집 문제 해결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

런 전략을 쓰더라도 영스타운의 인구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도시를 더 매력적이고, 덜 위험하고, 더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34]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휴공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공간 조성에 들인 비용만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에 솔직해져야 한다. 과연 문화의 힘으로 도시쇠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지역의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목욕탕, 폐교, 모텔, 주민센터, 승마장 등의 유휴시설'[35]이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

34) 참고. 에드워드 글레이저. (2011). 〈도시의 승리〉. 이진원 옮김. 해냄. p.131

35) "생활문화로 여는 문화융성 시대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조성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6월 10일자). 문화체육관광부. (2014).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2014년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문화정책과 도시재생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배경과 문제점을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문화와 문화재생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목표-수단-목적을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 생활문화센터의 지역적, 운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실증하였으며,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생활문화 개념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으나,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실무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생활문화동호회 또는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 생활문화센터 현황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헌 조사와 몇 가지 사례 분석 위주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생활문화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와 통계 체계가 개발된다면, 생활문화센터의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문화재생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표1]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 지역 지표(2021년)

부문	지표명	지표설명	기준 요건	자료원 및 공표시점
인구사회	과거대비 인구변화(%)	최근 30년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률	20% 이상 감소 지역 (-100 ~ -20)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1년 7월 공표
	최근 인구변화(년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3년 이상 연속 감소 (3 ~ 5)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2년 1월 공표
산업경제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	5% 이상 감소 지역 (-100 ~ -5)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22년 7월
	최근 사업체변화(년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3년 이상 연속 감소 (3 ~ 5)	
물리환경	노후건축물비율(%)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 (50 ~ 100)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2022년 1월

출처: 국토부, 도시재생 분석지표 개방데이터_도시재생 활성화 진단 지역 지표
※ 행정구역 경계 변경 등으로 년도별 비교가 곤란한 경우는 자료 미구축
(노후건축물의 경우, 준공승인년도 미확인된 자료는 계산식에서 배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분석지표 개방데이터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지표를 참고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3개 부문 5개 지표의 기준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3개 부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하고, 쇠퇴지역이 아닌 곳을 '비쇠퇴지역'이라 한다.

[부록 표2] 도시쇠퇴와 생활문화센터 유무의 관계

구분		Coef.	S.E.	Odds Ratio	dy/dx
인구·사회	과거대비 인구변화	.0021	.0020	1.0021	.0001
	최근 인구변화	-.0583	.0568	.9434	-.0027
산업·경제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0098**	.0030	.9903***	-.0004***
	최근 사업체변화	-.2551**	.0939	.7748**	-.0116**
물리·환경	노후건축물 비율	.0079	.0046	1.0079	.0004
상수		-2.4776***	.3417	.0839***	
χ^2		24.94***			
N		3,510			

dy/dx =Marginal Effect
$*p<0.05, **p<0.01, ***p<0.001$ (N=17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진단 지표에 따라 '비쇠퇴지역'과 '쇠퇴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전체 읍면동 3,537개 중 비쇠퇴지역은 1,243곳, 쇠퇴지역은 2,294곳으로, 쇠퇴지역이 비쇠퇴지역보다 약 1.8배 많으며, 쇠퇴지역과 비쇠퇴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쇠퇴 여부가 생활문화센터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3,53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 3개 부문 중 산업경제 관련 변수 2가지(과거 대비 사업체수 변화율, 최근 사업체수 연속 감소년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생활문화센터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 90% 신뢰수준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도 생활문화센터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록 표2]는 도시쇠퇴지표와 관련하여 생활문화센터 유무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로,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2 =24.94, $p<.001$).

분석 결과, 산업경제 항목에 해당하는 두 가지 변수 과거 대비 사업체 변화(Coef.=-.0098, $p<.001$)와 최근 사업체 변화(Coef.=-.2551, $p<.01$)는

생활문화센터 유무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비 사업체 변화의 승산비는 0.9903로 과거 대비 사업체 변화율이 1% 증가할 때 생활문화센터가 있을 승산이 0,97%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최근 사업체 변화의 승산비는 0.7748로, 최근 사업체 연속감소년수가 1년씩 증가할 때 생활문화센터가 있을 승산이 22.5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물리환경 항목인 노후건축물 비율(Coef.=-.0079, $p=0.087$)은 유의수준 0.1에서 생활문화센터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산비는 1.0079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 증가할 때 생활문화센터가 있을 승산이 0.79%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인구사회 항목인 과거대비 인구변화율과 최근 인구변화율은 생활문화센터 유무에 유의한 결정요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록 표3]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공간 유형 차이

구분	공간 유형				χ^2
	단독		복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존	46	52.8	49	83.0	14.0861***
유휴	41	47.1	10	17.0	
전체	87	100.0	59	100.0	

$^{*}p<0.05, ^{**}p<0.01, ^{***}p<0.001$ (N=146)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공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14.0861($p<0.001$)로 나타나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 활용에 따른 공간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의 비율이 각각 52.87%와 47.13%로 비슷하였으나, 복합 공간은 단독에 비해 기존 문화시설의 비율이 83.05%로, 16.95%인 유휴공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대개 지자체 건물의 일부나 부속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록 표4]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운영 방식 분포 차이

구분	운영 방식						χ^2
	위탁		직영		자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존	44	65.7	41	65.1	10	62.5	0.0572
유휴	23	34.3	22	34.9	6	37.5	
전체	67	100.0	63	100.0	16	100.0	

$^{*}p < 0.05, ^{**}p < 0.01, ^{***}p < 0.001$ (N=146)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 활용에 따른 운영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운영 방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5]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세부 운영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연간 예산	기존 (n=80)	90891.9	134944.5	-1.6388
	유휴 (n=48)	134752.9	164322.5	
면적	기존 (n=80)	10460.11	78342.49	1.2055
	유휴 (n=51)	718.91	582.4	
운영 인력	기존 (n=83)	2.35	1.81	-1.9587
	유휴 (n=45)	3.02	1.94	
프로그램 수	기존 (n=83)	19.17	47.77	-0.1393
	유휴 (n=49)	20.39	49.88	
이용자 수	기존 (n=87)	5757.35	9586.29	-0.6978
	유휴 (n=51)	7598.55	17356	

$^{*}p<0.05, ^{**}p<0.01, ^{***}p<0.001$ (N=146)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의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세부 운영 차이를 확인하고자 예산, 면적, 운영 인력,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 등 5개 변수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하였다.

기존 문화시설의 연간 평균 예산은 9,089만 원(SD=13,494만 원), 유휴공간의 평균 예산은 13,475만 원(SD=16,432만)으로 유휴공간의 평균 예산이 기존 문화시설보다 약 3,400만 원 높게 나타났다. 독립표본 t-test 실시 결과, $t=-1.6388$ $(p>0.05)$로 나타나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예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문화시설의 연간 평균 면적은 10,460.11㎡(SD=78,342.49), 유휴공간의

평균 면적은 718.91㎡(SD=582.40)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t = 1.2055(p > 0.05)$로 나타나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문화시설의 평균 운영 인력은 2.35명(SD=1.81), 유휴공간의 평균 운영 인력은 3.02명(SD=1.94)으로, 유휴공간의 운영 인력이 기존 문화시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test 결과, $t = -1.9587(p = 0.0524)$로 나타났으며,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운영 인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문화시설의 평균 프로그램 개수는 19.17개(SD=47.77), 유휴공간의 평균 프로그램 개수는 20.39개(SD=49.88)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test 결과, $t = -0.1393(p > 0.05)$로 나타났으며,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개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문화시설의 연간 평균 이용자 수는 5757.35명(SD=9586.29), 유휴공간의 평균 이용자 수는 7598.55명(SD=17356.00)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test 결과, $t = -0.6978(p > 0.05)$로 나타났으며, 공간 조성 방식에 따른 이용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간 세부 운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김기봉. (2016).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 김기봉 [연구] (2016). Print.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 Extablishing Policy Basis for Revitalizing the Culture-into-life Initiative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 정광렬 [연구] (2016). Print.

유지연. (2018). 생활문화공간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현황과 과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2), 105-142.

노수경, 손유진. (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 노수경 [연구책임] ; 손유진 [연구] (2021). Print.

강윤주. (2014). 생활예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web.

김규원. (2019). 개념과 실행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생활문화정책 변천사. 예술경영, 426(). 2019.6.27. web.

이상열, 이경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이상열, 이경진 [연구책임] 외.

이경진, 안지현. (2018).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고.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 31-49.

이경진. (2020).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영향평가. 도시정보, (459), 31-34.

김윤경, 이경진. (2021). 문화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자의 이해 차이와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35(2), 59-88.

김태영, 이은영. (2019). 문화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과제. 경남발전, (),48-58.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2021).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1-133.

곽강희. (2021).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창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8), 19-34.

김규원. (2019).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와 기대. 예술경영, 434(). 2019.10.24. web.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225&page=3&c_idx=90&c_idx_2=

김세훈, 서순복. (201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김성하, 황선아.(2016).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정책연구,(),1-141.

이재희. (2021). "지역문화시설(작은도서관)의 문화적 영향 및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52 (2021): 175-85.

박병춘. (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연구, 20(2), 1-26.
서익진. (2016). 문화적 도시재생 유형의 사례 분석 - 창원시 마산 원도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4(4), 363-382.
서모아, & 이현성. (2022). 문화도시의 거버넌스 유형분석을 통한 문화적 재생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7), 337-350.
곽희종. (2022). 도시특성별 법적 쇠퇴기준에 따른 도시쇠퇴 특징과 효과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위한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5), 19-34.
이상균, & 이금진. (2019).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지속운영 가능한 재생 방향 연구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지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7), 87-98.
김연진. (2009).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21(), 185-207.
엄상근, Sang Keun Eom, 남윤섭, & Yoon Seob Nam. (2014). 도시재생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쇠퇴지표 적용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3), 111-122.
임재현, & 한상헌. (2019). 지역 생활문화활동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6(3), 55-77.
강수현, & 김동언. (202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인시 보정역생활문화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4(1), 101-127.
노영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 노영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김현호. (2013).「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연구」, pp. 13-16;
채종헌. (2013).「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통합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pp. 16-20에서 재인용
강식, 김성주, 안창모, 이혜란, 심효섭. (2012).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 (), 1-62
안국진. (2018). 서울농대 부지 활용방안 분석-경기도·서울대·도코모모공모전 안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SRI 정책리포트, 2018-15
테리 이글턴. (2021).「문화란 무엇인가?」(1). 이강선 옮김. ㈜문예출판사.
에드워드 글레이저. (2011).「도시의 승리」. 이진원 옮김. 해냄
문화체육관광부. (2022).「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2020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7,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4). “생활문화로 여는 문화융성 시대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조성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6월 10일자). 문화체육관광부 web.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59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2020).「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2018). 2017~2018 개관 생활문화센터 공간 안내서「공간, 공감」,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22).「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예술공간이용 횟수-생활문화센터, (참조일자: 2023.06.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482&conn_path=I2
문화체육관광부. (2022).「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예술활동 공간 1년 이내 이용여부 및 이용횟수, (참조일자: 2023.06.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9836&conn_path=I2
지역문화진흥원. (2022).「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본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2021).「2021 생활문화센터 조성길잡이」,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2019).「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연구」.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2018).「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2017)」,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2017).「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2023).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모두의 생활문화」2차 심사 결과 안내, (발표 일자: 2023.03.17.) web.https://www.rcda.or.kr/board/notice_view.asp?b1cd=15&idx=19524
경기문화재단. (2023). 2023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 토론회 자료집,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문득〉. web.https://www.everydayculture.or.kr/index.do
국토연구원. (2007). 월간 국토 2007년 4월호 "용어풀이". 국토연구원 web.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570
유네스코. (2022). 문화정책의 (재)구성 – 2022 – 전지구적 공공재로서의 문화를 바라보다. UNESCO. (2022). Rel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Addressing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UNESCO.
세계적 수준이라던 '문화비축기지'는 왜 유령 전시장이 됐나. 한겨레. (2020년 2월 12일). web.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27998.html
문화비축기지, 개관 5년만에 안전사고 우려로 일부 긴급보수. YTN. (2022년 6월 12일). web.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1023600004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38〉 밀양 백산마을, 국제신문. (2021년 8월 1일). web.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20210802.22016000208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Regeneration of Idle Space

- Focusing on the Living Culture Center -

Sunmee Kim
Urban and Social Innovation Maj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arch of this yea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its 'Local Cultural Policy Promotion Strategy,' stating that they would prevent regional extinction through the power of culture. Such expressions have been frequently used in various policies since 2014, when the domestic urban development paradigm shifted to urban regeneration, emphasizing aspects such as 'enhancing awareness through culture,' 'community restoration through culture,' and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e.'

In the 1990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discussions on bridging the cultural gap in non-metropolitan areas began. Subsequently,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Culture" and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Law" in 2014, the paradigm of cultural policy shifted towards "cultural democracy," which emphasizes mor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process, the concept of cultural and

cultural democracy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development and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and the expression emphasizing the revival of the region through culture became inertial.

As the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s and the decline of local regions resulted in abandoned and idle spaces becoming social issues, the idea of revitalizing these idle spaces through cultural regeneration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address the problem.

Since 2014, the establishment of Living Culture Centers has been a representative case of revitalizing these idle spaces, aiming to enhance accessibility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y utilizing existing cultural facilities and idle spaces. However, even after nine years, the Living Culture Centers projects have not yet produced concrete result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strategies to activate these projects introduced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We need to consider whether spaces that have lost their original purpose can regain vitality through the creation of cultural spac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utilizing idle spaces for cultural purposes through Living Culture Centers on local communities.

Firstly,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the study comprehended the concept of cultural regeneration widely used in cultural policies and explored the institutional flow related to community culture and urban regeneration. Subsequently, the operational status of Living Culture Centers was examined to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regeneration in idle spaces. Additionally, an in-depth analysis of case studie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such cultural revitalization of idle

spaces on the local community in term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s,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engage in cultural activities, and the activation of local communit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Living Culture Centers and carried out case studies on 173 such centers nationwide.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more than 75% of Living Culture Centers are located in urban areas, and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ity, they are most prevalent in non-metropolitan and declining regions. Living Culture Centers have shown the highest recent growth rate compared to other 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cultural centers, etc., and they have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other cultural infrastructure. Thi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focus was on quantitative expansion to bridge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Secondl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Living Culture Centers showed variations in terms of area and budge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operating personnel and program content. Empirical analysis comparing Living Culture Centers with existing cultural facilities and idle spaces reveal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nd there were few cases that incorporated the identity or characteristics of idle spaces into their programs.

Thirdly, the impact of Living Culture Centers on local communities varied depending on the target area and the understanding of community culture, as well as the capabilities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While Living Culture Center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community culture by utilizing old and idle spaces, the content and effects of these centers varied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ir operation. Most of the idle spaces did not possess exceptional historical or cultural value but were simply spaces that had been left unused for an extended period. There were few distinctive programs compared to other cultural facilities, and not many programs were tailored to reflect the local characteristics.

The success of revitalizing idle spaces through cultural regeneration is quite rare. Merely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activation, but also requires differentiated programs,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proper administrative support, and specific definitions of target groups and contents. Moreover, the utilization of the increasing idle spaces needs to be more diversified. It is essential to contemplate how to handle the continuously increasing idle spaces in a positive effect on local communities, rather than relying on the vague concept of ‘culture’.

This study focuses on Living Culture Centers and examines the background and issues of idle space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s, evaluating their effectivenes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he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operating Living Culture Centers and revitalizing idle spaces through cultural projects. The study's policy implications hold significant value in terms of suggesting alternatives and strategies for Living Culture Center operations and idle space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s.

keywords : Idle Space, Cultural Regeneration, Community, Local Culture, Living Culture Center

Student Number **: 2020-28334**